



**“민족생존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국론 결집으로 응징하자”**



통일시대

COVER STORY
안보 논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독일 학자의 특별기고
“한국인은 거짓 평화투쟁에 속지 말라”

인터뷰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족생존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국론결집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유럽협의회

도발 대응체계 혁신하라

우리는 매우 엄중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국민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9월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CONTENTS

2016년 10월 VOL.120



06



28



42



50

62

02 이달의 메시지

도발 대응체계 혁신하라

커버스토리

06 안보 논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도 예측 불가능해져야 한다

10 특별기고

서독의 퍼싱 배치와 한국의 사드 배치
'거짓 평화투쟁'에 속지 말라
공산주의자들은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는다

12 특집

동북아 안보외교의 변화 전망
차 대통령 동아시아 외교 오디세이
"공동 번영의 미래 비전 토대 다졌다"

16 진단

중국 경제와 동북아 정세
지역구도 재편 요구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통일을 꿈꾸는 우리에겐 특인가 독인가

20 분석

공공외교법과 통일공공외교의 방향
소프트 파워의 향기 '한국의 매력',
'한국의 창의력'으로 세계를 유혹한다

24 이슈

대북 제재와 북한의 경제 동향
북한은 핵·경제 병진에서
'핵 우선, 경제 다음'으로 돌아섰다

28 진단

북한 제5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
남북 사이에 '공포의 균형' 유지돼야
한반도 비핵화 가능해

32 포커스

북한 엘리트의 탈북이 주는 의미
김정은의 요인 숙청이 불러온 새 현상
'일시적 탈북'에서 '구조적 탈북'으로

36 북한 IN

'단 한 발로 결정짓는' 북한 SLBM 위협
4전5기 만에 등장한 '게임 체인저'

38 과거에서 미래를 찾는다

다시 읽는 <징비록(懲毖錄)>
진인한 왜군, 포악한 명나라군 사이에서
조선을 '간신히' 지킨 류성룡의 피울음

42 특별 인터뷰

권태오 사무처장
"갑자기 찾아올 통일 위해
'통일은 내 손안에' 인식 확산해야 할 것"

46 글로벌 평론

황재길 아프리카협의회장
아프리카에 심는 평화통일의 힘

48 현장 특집

2016 재일동포 청년 모국 방문 연수
짧은 만남, 긴 여운 ~
'자이니치'들의 뿌리 찾기와 한반도 이해하기

50 뉴스 & 민주평통

• 국내외 협의회, 북한 5차 핵실험
규탄하는 다양한 활동 펼쳐
•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생 대상 토론회
• 뉴질랜드협의회·파라과이협회

60 협의회 탐방

부산 부산진구의 '여성 통일수다방'
"북한의 고부관계 들어봅시다"
"예고 우리와 똑 같구먼~"

62 통일 문화유산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본 조선 마을
넓고 깊고 아늑하고 따뜻하다

66 통일 칼럼

핵무장론을 경계함



표지 이야기
북유럽협의회 자문위원들이
독일 쾰른의 Kaiser Palast 별
관 앞에서 북핵 규탄을 외치
고 있다.

통권 제115호 2005년 5월 1일 창간
발간등록번호 11-1081000-000009-06
발행일 2016년 10월 1일
발행처 권태오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우)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대변인실 02-2250-2264~6
기획편집위원 김근식, 김영수, 김진하, 박인휘,
이화옥, 조봉현, 최우선
편집디자인·인쇄 동아일보 출판국·삼성문화인쇄(주)
자료사진 동아DB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입니다.
• <통일시대>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시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 e-book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도발했을 때 북한을 응징할 현무-2(왼쪽),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미국의 사드 미사일.

안보 논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도 예측 불가능해져야 한다

‘물가에서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속담을 잊지 말자. 안보에는 이견이 없다는 단결과 한·미·일 공조 강화, 그리고 전력 증강을 가속화해 김정은의 의지를 꺾어버려야 한다. 통일로 나가야 한다.

북한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4차 핵실험 8개월 만에 기습적으로 실시했기에 국제사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실험을 통해 약 10킬로톤에 육박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선보였다.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위력 12킬로톤에 근접한 수준이다.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5차 핵실험 이전까지 북한은 각종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하며 다중화에 한걸음 다가섰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는 물론 규격화, 표준화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이 추

세라면 북한의 핵전력은 실전배치 직전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을 거쳐 ‘최종적인 핵무장 완료 상태’를 선언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 일본, 괌을 비롯한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중요기지들이 사정권에 놓인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조만간 알래스카와 미 서부는 물론이고 워싱턴과 뉴욕 등 동부권도 위협해진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탄두의 재진입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도 결국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그만큼 위축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개발해야 하는가. 예방 차원이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4, 5차 북한 핵실험에서 경험했듯이, 아무리 한·미·일의 감시·정보·정찰(ISR) 자산이 발달했어도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발사 순간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확장억제 전략 확장해야

따라서 대안은 간단하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강력한 응징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한미 정부의 강력한 합의로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11월 대선 이후 미국의 새 행정부는 경고와 함께 기존의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확장억제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

2006년 애시턴 카터 현 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언론 기고를 통해 주장했던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예방 차원의 공격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는 큰 위험 부담을 안게 됐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투하할 경우 62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김정은이 3월 11일자 노동신문에 공개한 ‘화력 전략타격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9개 항만과 원자력발전소와 산업시설이 밀집된 울진지역에 핵미사일을 발사해 대재앙을 만들려 하는 것 같다. 핵 투발 의지와 능력을 가진 북한을 억제한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볼모로 잡으면 미국 신정부와 협상해 좀 더 큰



홍규덕 숙명여대 정외과 교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정치학 박사, 남북교류협력추진위 위원,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등 역임. 현재 숙명여대 교무처장, 민주평통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한국 유엔체제학회 회장, 국가보안학회 회장, 국제정책연구원(PSH-KOR) 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말로를 본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만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완성 단계 선언은 스스로를 파멸로 가져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무리수가 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이를 좌시할 수 없고, 국제사회는 동북아의 핵도미노를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응책 모색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뇌과학자인 김대식 교수는 칼럼을 통해 “우리도 예측 불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의 옵션이 그리 많지 않겠지만, 미국의 전략자산만을 바라보고 미국이 해결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 관행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 일부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라고 하는 ‘상호확증파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하며, 1년 반 정도면 수소폭탄도 만들 수 있기에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주장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하자는 주장이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반입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핵무장이나 전술핵무기 재반입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큰 만큼 철저하게 비핵 전략무기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개념은 주한미군의 생명과 미국의 국가이익 수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최단 시간에 북한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미 본토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등이 있으니 미국의 핵무기를 북한의 사정권 안에 두는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무기를 반입하게 되면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첨단 무기나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보다 우리의 의지이다. ‘성동격서식’ 전략도 필요하다.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그야말로 이노베이션이 절실하다.

핵심 국가이익을 토론한다고?

우리 사회는 북한의 핵 도전이 가져온 안보 위협에 아직 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그 대표적인 예다. 북한의 핵 고도화와 ICBM, SLBM 개발 등에 따른 안보 상황은 너무도 위중한데도 국론이 분열돼 있다. 민주사회는 안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정책 결정을 달리 할 수 없는 핵심 국가이익에 관한 사안들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 생존에 관한 중차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물가에서는 정치적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Politics stop at the water's edge)’라는 유명한 격언처럼, 국민의 생존이 달린 안보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월 13일 이순진 합참의장(왼쪽)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도발 땀 북한 정권 궤멸'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전략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외교, 안보, 통일 영역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대전략’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도 1964년 핵을 보유한 이후 한반도 문제를 미·중 대결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대전략도 없이 사드 도입에 대한 찬반이라는 미시적 접근으로 국론이 분열돼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배치하는 단계에 도달했지만 우리의 대비태세는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발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게 하는 외교적 노력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 민간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 제재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민생 문제를 이유로 대북 제재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집착 이유를 미국의 대화 의지 부족에서 찾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개별국가의 단독 제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을 설득하고 동참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임무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제작에 사용되는 고체연료 모터와 주요 핵심부품, 이동식 발사대 차량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도록 고삐를 죄어야 한다. 강력한 국제 제재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란 점을 자신 있게 중국에 이야기해야 한다.

국방력 강화는 전 국민 자원이 있어야 가능

둘째, 우리의 군사전략을 더욱 공세적으로 바꿔야 한다. 미·중 갈등의 확대 속에서 우리 군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시 우리 군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 전술, 작전능력, 작전지원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이러한 목표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셋째, 사드뿐만 아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우리 미사일 방어정책의 실효성도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 핵이 한반도 전구(戰區)를 넘어 태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중에 열린 한미 확대 정상회담. 한미 공조는 작금의 안보 위기를 풀어나가는 바른 길이다.

평양과 미 본토를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호 개념을 한반도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중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이지스함에 SM-3(해상 발사 장거리요격미사일) 체계를 시급히 장착하고, 적의 중심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수단과 병력 운송수단들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2023년에 완성한다고 발표해왔지만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ISR 자산 없이 두 시스템은 가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위해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군이 최근 공개한 ‘대량보복 및 응징전략’ 개념도 이를 뒷받침해줄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국방력 강화는 국방부와 군을 넘어 재정당국은 물론 전 국민적 지원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김정은 집단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군사적 역량과 의지가 선행돼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대화의 역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확장억제 개념은 진일보돼야 하며 사이버 전력, 재래식 전략무기, 우주전략자산과 함께 미 핵우산을 포괄하는 다층적 역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의 대북 메시지는 좀 더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며, 북한 집권층과 달리 고통 받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NUAC**

서독의 퍼싱 배치와 한국의 사드 배치

‘거짓 평화투쟁’에 속지 말라 공산주의자들은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는다

독일 통일 전 구소련은 동독에 SS-20 미사일을 먼저 배치했다. 그에 대해 서독이 미국의 퍼싱 미사일을 배치하자 공산주의자들은 전쟁 공포심을 퍼뜨리며 퍼싱을 철수시키기 위한 평화투쟁을 벌였다.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다.



데탕트 이후 유럽에서 신냉전을 일으켰던 구소련의 SS-20과 미국의 퍼싱 중거리미사일(작은 사진).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이 SS-20을 동독에 먼저 배치한 것은 지우고 미국이 퍼싱을 서독에 배치해 평화가 흔들렸다고 거짓 주장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방어적 요격미사일은 한국의 군사·안보적 빈틈을 메워 줄 것이다. 이 미사일이 없다면 갈등이 첨예화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무방비로 당해야 하는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기만 해도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협박 요구에 응하든지 아니면 또다시 전쟁으로 빚어질 폐허를 감수하든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북한 정권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평양은 그러한 방어미사일의 배치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북

한은 북한의 공격적인 미사일 개발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정치선전 패턴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갈등 고조의 원인을 항상 적에게 돌린다. 이번 경우에도 남쪽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 북한은 북한 내부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설명할 때 실질적 안보 상황을 왜곡한다. 북한은 한반도 지역의 불안을 야기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이 북한 정권의 핵무장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가 지역 불안을 조장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측이 노리는 안보정책적 노림수가 무엇인지 간파할 수 있다. 미국의 요격미사일이 한국에 배치

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무장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감소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에 정치적 양보를 강제하기 위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겠다고 위협해도 한국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는다. 사드 배치는 북한 정권이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 평화를 어지럽히려는 정책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을 고려하면, 중국의 북한 두둔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한반도 상황을 냉전기 유럽에서의 서방권 대 구소련 간의 분쟁관계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1975년에서 1986년 사이에 유럽에서는 중거리미사일 배치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당시 동·서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에 속해 있었다. 양 독일은 미사일 배치 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편에도, 소련의 편에도 서지 않았다. 이 문제로 전쟁이 발발하면 분단 독일은 전쟁의 한복판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핵무기를 동원할 수 있었다.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는 선동

위기는 1975년과 1976년 구소련이 유럽을 향해 동독에 SS-20 중거리 핵탄도미사일(사거리 4500km)을 배치하면서 시작됐다. SS-20 중거리미사일은 유럽과 아시아는 공격할 수 있으나, 미국을 위협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미국이 유럽 안보 문제로부터 분리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1949년부터 구소련이 고대하던 바였다.

SS-20 배치는 대대적인 정치선전을 수반했다. 미국이 구소련에 대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비난 등이었다. 이 선전은 서유럽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나토의 미사일 배치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이 확산된 것이다. 철의 장막을 맞댄 동서독 양 진영이 미사일 배치 문제로 유럽에서 제한 핵전쟁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다.

서독은 NATO에 군사전략적 대응을 촉구했고 그 결과 1979년 나토는 2단계 계획을 결의했다. 첫째는 미국과 구소련 간 협상으로 소련의 선제공격 무기인 중거리 미사일을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군축협상이 무



만프레드 빌케 전 베를린자유대학교수
1941년 독일 카셀 출생. 베를린자유대학 사회학 교수 자격 취득. 베를린경영대 사회학 교수. 뮌헨현대사연구소장 역임. 현재 그라츠 루트비히 볼츠만 전쟁결과연구소 연구위원(현대역사학자). 평론가로도 활동 중

산된다면 나토는 서유럽에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것이었다. 헬무트 슈미트 서독 총리는 1979년 서구의 맞대응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1983년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미국의 퍼싱(Pershing) 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퍼싱 미사일 배치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대중운동(평화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구소련의 선(先)무장이라는 원인과 미국의 미사일 배치라는 결과를 바꿔치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독의 세칭 ‘평화전사’들은 구소련의 SS-20 미사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미국이 전쟁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은 구소련을 제압하기 위한 선제공격 무기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영향 받은 ‘평화공세’는 대중들에게 ‘핵전쟁으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조장했다. 그들의 구호 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 모두는 핵으로 인한 죽음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었다.

방어용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려는 한국과 달리 1983년 서독에는 모스크바까지 도달 가능한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이 배치됐다. 동서독이 통일된 후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는 1985년 구소련의 대통령이 됐던 미하엘 고르바초프에게 ‘전략 핵무기와 중거리미사일의 철수를 결정한 동기를 질문한 바 있다.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근교의 요격미사일 배치 기지를 방문해 기지사령관으로부터 “전시 상황이면 독일에 배치된 미국 미사일이 경고시간 없이 바로 모스크바로 날아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구 진영과 구소련이 함께 핵 지옥이 돼 멸망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게임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1987년 이런 죽음의 게임을 멈춘 것은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공이라고 할 수 있다. **NUAC**



동북아 안보외교의 변화 전망

차 대통령 동아시아 외교 오디세이 “공동 번영의 미래 비전 토대 다졌다”

역내 지역질서가 재편되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9월 초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 3국을 순방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논의를 하는 장을 만든 것이다. 국익을 위한 외교 오디세이에 도착역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중국 항저우-라오스 비엔티안-서울로 이어지는 외교 여정을 보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항저우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여해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라오스에서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오바마 대통령 및 아베 총리와의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짧은 기간에 4강 정상을 모두 만난 것이다.

이번 순방은 7월 8일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이뤄진 것이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 퇴임을 앞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마지막 정상회담이고, 아베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박 대통령의 외교 오디세이는 어떤 배경하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었는가. 그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외교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은 역내 국제질서는 재편 중

지금 역내 국제질서는 재편 중에 있다. 세계는 1989년 동유럽 체제 전환과 1991년 구소련 해체를 통해 냉전체제, 양극체제, 일대체제의 붕괴를 겪었다. 2001년 이후의 테러전 시대를 거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겪었다. 지금은 중국의 부상으로 G2(중국과 미국) 체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2012년 주요국 지도자들이 새로 등장한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와 ‘재균형’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실크로드,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신동방정책,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등 주요국의 정책도 경쟁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후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 결정은 이러한 군사·안보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책의 일환인 것이다. 엄중한 상태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기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연세대 정치학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제안보연구실장 역임. 현재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 민주평통 상임위원. 저서 <러시아 현대 정당사>, 공저 <한·러 협력 2030 청사진> 등.

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이해를 구하며, 신동방정책에 조응해 러시아와의 경험을 한 단계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회담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담고 있다.

첫째, 2013년 11월 푸틴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그간 이뤄지지 않은 방류를 통한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한·러 정상회담 정례화를 지속적으로 시현한 것이다. 방류를 통한 이번 정상회담은 한·러관계 자체로 보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실기하면 다음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차 방문을 통한 한·러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미·중·일 등에 비해 외교적 우선순위가 낮고 관심이 저하돼 있는 양국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둘째, 최근 안보 현안 논의와 양국관계 관리 차원의 실무방문 성격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고 대북 제재에 대한 지지 확보가 주요 목표인데, 이는 중국의 사드 반발에 대한 간접적 차단 효과도 담고 있기에 중요했다.

셋째,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연계된 한·러 간 새로운 협력 기제 창출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신동방정책 간의 정합성 제고의 기회 제공이다. 러시아판 ‘블라디보스토크 컨센서스’에 참여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넷째, 아베 일본 총리도 러시아를 방문해 러·일 정상회담을 가졌으니, 대러 접근과 역내 질서 재편 과정에서 서의 상대적인 소외 가능성을 사전에 없앴 효과도 있었다. 윤병세 외교장관의 러시아 방문(6월13일)과 한·러 경제공동위의 개최(8월 25일)는 이 회의를 위한 사전 회의였다.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전체 섹션 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공조와 동맹을 재확인한 박근혜 대통령.

조연설을 통해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비전과 한·러·일, 한·러·중 등 다양한 소(小)다자 협력, 전력·철도·에너지 등 인프라망 연결 등의 협력 사안을 제시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 제시와 함께 북한이라는 ‘끊어진 고리’ 해소와 도발 억제 등에 대한 국제 공조도 강조했다.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관련 21건 등 총 2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극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했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등을 통해 한·러 협력을 강조하고 상호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러 정상회담 정례화의 시현과 전략적 소통 강화 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동력 확보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이해 제고와 대북 제재에 대한 협력 확보 ▲한국 기업의 극동지역 프로젝트 참여 토대 마련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기반 마련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비전과 방안 제시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늘 지적돼왔듯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세부 실천이 더 중요하다. 잠재해 있는 러시아와의 갈등 요소도 잘 인식하고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

항저우 G20 정상회의가 주목받은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문이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G20 정상회의는 ‘G20 항저우 컨센서스’ 발표 등으로 중국의 달라



‘구존동이(求存同異)’와 ‘구동화이(求同化異)’가 화제가 됐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사드 문제로 이견을 보였으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진 위상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자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기회이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의 외교적 결례를 불사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달라진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미·중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막후에서 펼쳐진 것이다.

총력 외교가 필요한 때

우리에게 G20 정상회의는 2010년에 이를 개최한 개최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새로운 요인 출현과 날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처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개발 이슈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한편,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에의 일정한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 기여할 부문에는 기여하되 우리의 목소리와 이익을 창출해 내야 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창조경제를 포용적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으며, 자유무역체제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에의 동참도 강조했다. 혁신, 포용적 성장, 구조개혁, 자유무역 논의와 정책 공조를 주도했던 것이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로 이견을 보였지만, 한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데 나름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구존동이(求存同異)와 구동화이(求同化異)의 용어가 화제가 되었는데, 표출된 이견은 앞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 중, 러, 일, 인도 등의 정상들이 참석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증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 등을 다뤘다. 이 정상회의는 ‘비확산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어 개최된 제19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그간의 협력 성과를 논의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 비전 가능성과 실현 노력을 강조했다.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준 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실현에의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같은 곳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은 가장 강한 우방국답게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조를 확약하고 한미동맹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나아가 글로벌 보건과 기후변화, 우주 등 뉴프런티어 분야, 난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만남 이후 6개월 만에 개최된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중 3국정상회의 개최,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블라디보스토크와 항저우, 비엔티안까지 함께 움직인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비엔티안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짧은 기간 박 대통령은 3개국을 돌며 4강 정상을 모두 만난 것이다.

의 협력이 토의되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해 주목을 받았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신뢰 구축 노력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발전된 양국관계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고, 18건의 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국방협력, 교역·투자, 에너지,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북핵·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라오스 방문 끝 무렵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 북한 변수가 국제 정세 및 한반도 안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역내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국제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깨달아야 외교적 해안도 나오고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사고도 탈피할 수 있다. 한반도가 처한 외교·안보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대내적으로 국론을 결집한 가운데 총력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순방 외교의 성과가 밑거름이 되어 향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슬기로운 외교를 잘 펼쳐나갈 기 대해본다. **NUAC**



'미국 따로, 중국 따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는 미·중 갈등을 그대로 그려냈다. 현상 변경을 요구하는 중국과 국제 규범 준수를 강조하는 미국의 압박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중국 경제와 동북아 정세

지역구도 재편 요구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통일을 꿈꾸는 우리에게 독인가 독인가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역 질서 재편을 요구한다. 이를 미국과 일본이 적극 견제한다. 한국은 그 틈을 이용해 성장을 거듭했으나 사드 배치를 놓고 모순에 직면했다. '공동의 이익'으로 지역 모순을 덮으려는 노력은 성공할 것인가.

중국은 2010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국가가 됐다. 놀라운 건 GDP 증가 속도다. 2008년 GDP 규모 1위인 미국의 30.9%에 불과했던 중국의 GDP는 7년 뒤인 2015년 미국의 61.2%가 됐다(IMF 자료). 상대적인 성장에서 두 배 이상 커진 것이다.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만 해도 4.4%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 9.0%, 2015년에는 14.0%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의 비중은 12.0% → 8.1% → 9.2%로 줄어 들었다.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위상이 얼마나 빨리 높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로 시각을 좁혀보면 중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진다. APEC 국가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9.3%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20.3%, 2015년에는 27.3%로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2001년 25.5%로 1위국이었으나 2008년 18.4%로 2위로 추락하고 2015년엔 18.0%로 줄어 들었다. 경제 규모와 수출에 관한 한 중국은 이미 아태지역 최강대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초래한 중국의 부상

중국 경제가 부상한다면 국제 경제와 국제 정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 세계 시장에 더 많이 수출되고, 중국은 더 많은 물건을 수입함으로써, 중국으로 들고 나는 투자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 나쁠 게 없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값싸고 질 좋은 중국 제품 덕분에 적은 비용으로 생산, 소비 등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 이후 국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한계에 직면했던 한국, 대만 등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들은 중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해 저임금의 숙련된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중국 제품 때문에 국내 일자리를 잃는다는 우려도 많았지만 부작용보다는 이익이 더 컸던 것이다. 미국, 일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한국외국어대 국제관계학 박사(중국 정치 경제 전공), 외교안보연구원 선임연구원, 상하이사회과학원 방문학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논저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등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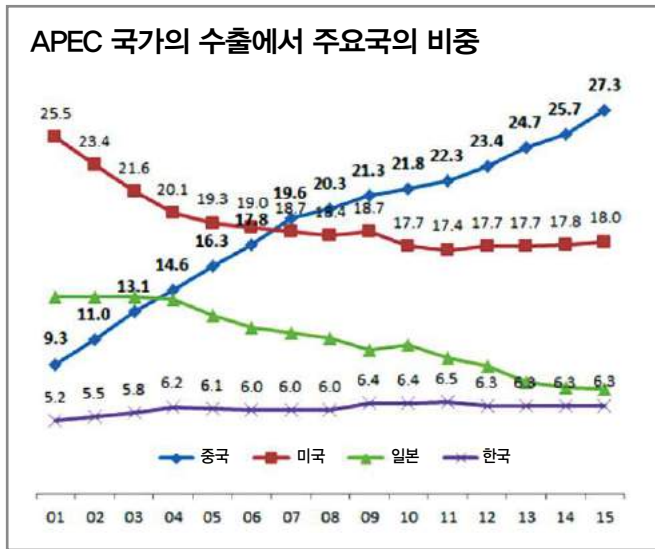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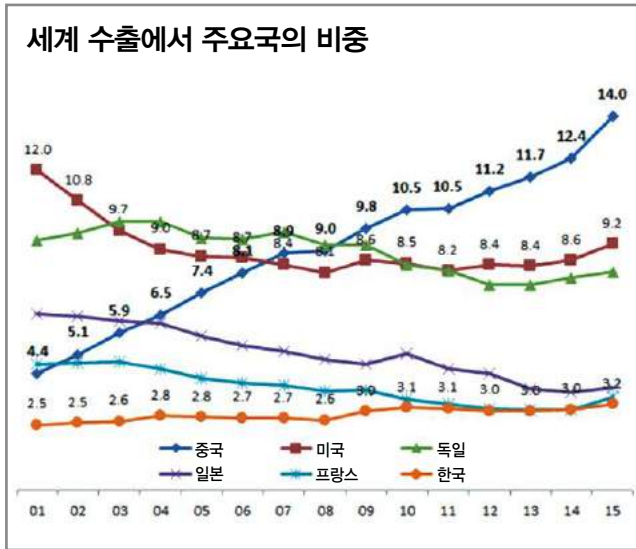
본 등 주요 국가의 경제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전까지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의 부상은 세계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을 국가 간의 관계, 즉 외교·안보와 연결해보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경제력이 바뀌면 권력관계도 바뀌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부상은 당연히 게 여겨졌던 기존의 국가 간 이해관계와 규범에 변형을 가져오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생겨난다. 중국 산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면 상대국에서는 산업 기반 약화와 실업자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주요 시장에서 입지도 줄어들게 된다.

그때까지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던 제품의 표준(규격)과 국제 공동개발계획, 환율,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경제기구 운영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그에 따라 기득권 국가들은 힘이 빠지고, 그들이 누려오던 경제적 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중국의 대외 경제정책은 자국의 영향력 증대와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중국은 수동적으로 수출과 투자 유치에 힘써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은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했다. 해외 진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 나아가 주변국, 주변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지역과의 협력 틀을 강화하려 노력한다.

이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진다. 중국의 부상을 느긋하게



자료 : Trade map 자료로 계산

바라봐오던 글로벌 초강대국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태도를 바꿨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자체는 거부하지 않되(중국은 최대의 시장이므로) 중국을 배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견제에도 힘쓰고 있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는 2011년 힐러리 당시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선언한 후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현재 미국이 벌여놓은 중국 견제 수단은 남중국해 관련 압박, 인도 및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 강화 등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긴장하는 국가는 단연 일본이다. ‘기러기떼 모델(일본을 정점으로 하고 아시아 각국이 발전 순서에 따라 분업에 참여하는 국제 분업모델)’이라는 이름하에 동아시아 전체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 분업체제로 만들려고 했던 일본에 중국의 부상은 이 전략의 와해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국 견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된다. 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등 아-태지역의 주요 통상협상에서 일본이 중국에 협력적이었던 적은 거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중·일 간 갈등의 격화(영토, 역사 문제, 미·일동맹 강화 등)가 두드러졌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중국 지역경제전략의 ‘남쪽 핵심’인 아세안에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구애’와 아세안의 ‘균형외교’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 아세안은 ‘숙적’ 일본과 시장 쟁탈전을 벌이는 마당이자 아세안 국가들의 경계심을 무마하면서 동시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원만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이다.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도 대처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북방의 오랜 경쟁국인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그동안 소원했던 중·러관계 강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미·일 대 중·러 간 대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중 경제 통합과 안보 분야의 이견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심각하면서도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이다. 중국의 부상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껴온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중국의 개방과 성장을 가장 잘 활용해온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수출 드라이브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이룬 뒤 국내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에 직면했던 한국은 한중수교(1992년)를 통해 생산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외교·안보적 갈등은 금방 경제 문제로 비화한다. 이 때문에 규범 준수가 중요하다.

중국의 부상 이후 동아시아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공동의 이익이라는 미시적 안정성으로 조금씩 덮어가는 ‘길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지도 모른다.

성장 둔화를 벗어날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내수 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을 계속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경제는 사실상 ‘통합’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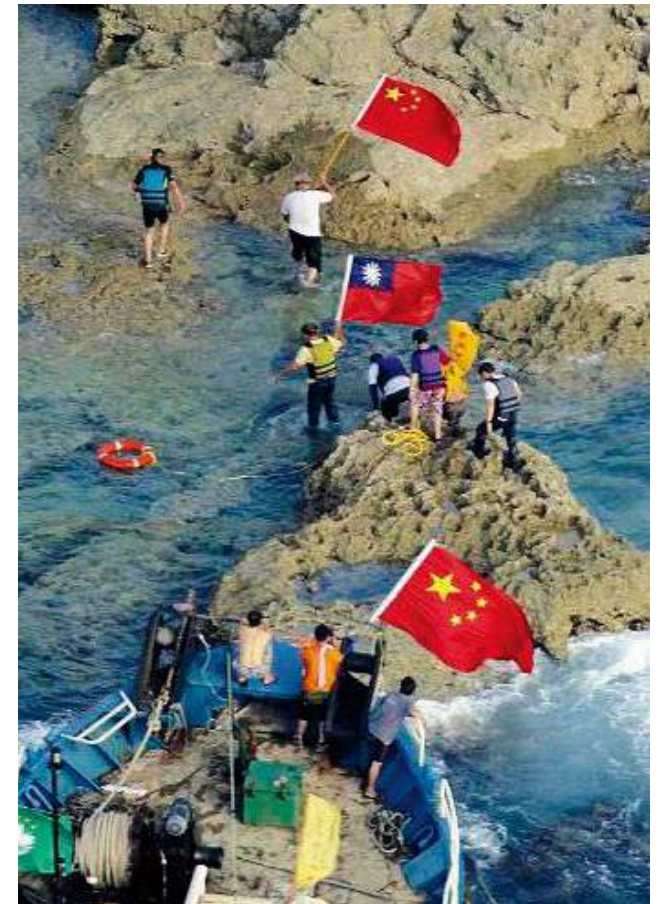
중국 경제의 부상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일부 외교·안보적 영향력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둘러싼 국내외의 우려와 논란은 우리가 원하던 바는 아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거나 중국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 제재가 사실상 중국의 손에 좌우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대(對)북한 영향력은 절대적인 수준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이로울 것인가? 공동 발전과 평화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침체와 불안정으로 갈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두 시각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 있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성장과 미·일의 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과 한국,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대응함으로써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고정된 상황 전개를 단정하기보다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기존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행히도 지금까지의 검토 내용을 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반응이 우호적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

그러나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관계를 더욱 빨리 규범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규범 준수를 공언해왔다. 중국 역시 개방경제를 표방하는 가운데 성장과 경제적 위상 증대를 이뤄왔으니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적 갈등이 경제 분야로 파급되는 것도 최소



2012년 일본령 센카쿠에 상륙하는 중국과 대만의 청년들. 센카쿠 갈등은 동북아 지도력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경쟁을 보여준다.

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외교·안보 분야의 갈등이 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막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근래 중국이 해온 말이나 실제 정책을 보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중국의 부상 이후 동아시아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미시적인 안정성(즉 공동 이익 확대)으로 조금씩 덮어가는 길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지도 모른다. **NUAC**

공공외교법과 통일공공외교의 방향

소프트 파워의 향기 ‘한국의 매력’, ‘한국의 창의력’으로 세계를 유혹한다

이제 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로 국익을 확대할 수는 없다. 부드러운 힘, 넉넉한 인심, 매력적인 한류가 더 한국을 존경받게 만든다. 그것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올해 5월 서울 삼성동 영동대로에서 열린 '2016 C-Festival K-팝 콘서트', '강남스타일'처럼 세계를 제패한 댄스곡이 우리의 통일을 지지해주는 세력을 만드는 중요한 우군이 된다.

지난 8월 4일 범국민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공공외교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공공외교법'이 발효되었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법 발효를 계기로 기존의 문화 중심 공공외교를 정책, 지식, 문화가 융합된 공공외교로 확대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풍부한 매력 자산을 활용해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며, 우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의 폭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20대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에 '공공외교강화소위'를 구성했다. 이는 여야 모두가 공공외교 추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통일 기반·우호세력 확보해야

냉전 종식 후 국제사회는 군사력과 같은 전통적 파워 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 자산 개발에 몰두해왔다.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교수의 '소프트 파워'가 그러한 추세를 대변한 핵심 주장이었다.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은 앞다퉂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외교 수단을 개발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한류와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우리 방식의 공공외교를 정립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차에 한국의 우수한 공공외교 자원과 역량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완벽해주는 법을 제정했으니, 공공외교를 통일외교에 접목해 우리의 통일 의지를 국제사회에 더욱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역임,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외교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현재)

박근혜정부는 '통일 환경 기반 구축'을 4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의 통일 과정 진행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기반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통일 시점을 가능한 한 앞당기고 그 방법을 평화롭게 이뤄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매우 중대하지만 동시에 추상적이고 막연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호적 통일 환경 기반 마련은 우리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통일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역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주요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대(對)아시아 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이해시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공공외교법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만들어졌다. 국제외교 환경은 네트워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한다면 통일외교는 통일공공외교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외교 자산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핵 문제와 북·중 관계 등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직면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미국의 지원과 역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미 통일공공외교를 '목표의 차



올해 6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K-팝 프로젝트 '소년24' 제작발표회. 우리는 세계를 파고드는 한류와 접목시킨 공공외교로 우리를 지지해 주는 세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도의 통일을 만드는 공공외교다.

원, '내용의 차원', '행위자의 차원', 그리고 '추진체계의 차원' 등으로 정교하게 개념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개념을 담당하는 미국의 집단을 대상으로 통일공공외교를 펼쳐야 한다.

통일공공외교의 목표도 핵심적인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핵문제 관련 영역', '북한 정상화 관련 영역', 그리고 '남북한 통합(통일) 관련 영역' 등으로 나뉘어서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통일공공외교 활성화 주력해야

우리의 글로벌 통일공공외교는 내용 차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부행위자 중심성', '북핵 문제 중심성', '위기관리 중심성', 그리고 '리더십 관계에 종속적'이란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통일공공외교가 비정부행위자 차원에서 주도하기 어려운 정책 분야라는 점을 보여준다.

핵문제가 다른 사안들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발견된다. 남북한 사이에는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고 그러한 위기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전반에 영

향을 준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리더십 특징에 따라 대북한 정책공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있다.

통일공공외교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추진 주체'의 차원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역할 분담과 공조체제의 구축이다.

현재와 같은 불명확한 역할 분담은 통일공공외교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통일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 국회의 역할이 제한돼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통일공공외교의 제도화가 이뤄지는 곳이다. 과거 미국은 여러 나라를 상대로 체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외교정책을 구사했다. 그때 큰 기여를 한 것이 미국 의회였다. 그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국회가 통일공공외교와 관련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둘째, 통일공공외교 '자산'의 확장이다. 민간 분야의 전문가와 그들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통일 관련 정책은 정부가 주도한다고 해도 참여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기를 향해서 치달을 때

공공외교를 강화해 우군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다.

하는 이들의 특징을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을 구현하는 데는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기업과 비정부기구(NGO), 언론인, 일반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 구현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이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지식을 통일공공외교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행정부 관료와 싱크탱크, 의회 등에 집중되고 있는 대미 통일공공외교를 확대해야 한다. 통일공공외교를 하는 대상을 넓혀야 하는 것이다. 통일 추진 과정에서 우리는 주요한 여러 나라를 협력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협력국가들은 사회적 다양성이 광범위한 나라다.

마지막 남은 과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의 성격과 정체성이 천차만별인데 그중 누가 어디에서 한반도 통일 과정에 어떤 도움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글로벌 통일공공외교 대상은 광범위한 수준으로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한국의 통일외교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사회 각층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국제사회의 합의와 지지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는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기를 향해서 치달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2013년 열린 제1회 한중 공공외교포럼에는 장신쑨 주한 중국대사, 리자오싱 중국 공공외교협회 회장, 박병석 국회의원,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왼쪽부터)이 참석했다.

국제사회를 향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은 한국의 평화통일이 동북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 산업화, 민주화, 국제화로 이어지는 국가 어젠다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핵심 국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이러한 성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남은 과제가 통일이다. 통일 과제는 국제화, 외교 선진화와 맞물려서 추진돼야 한다.

한국의 우수한 문화 자산, 국민적 역동성, 전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전문적인 NGO, 다방면의 국민 인재 등 다양한 외교 자산을 포괄하는 통일공공외교 프로젝트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본다. **NUAC**

대북 제재와 북한의 경제 동향

북한은 핵·경제 병진에서 ‘핵 우선, 경제 다음’으로 돌아섰다

북한의 국가경제와 인민경제는 분리돼 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시장에 의해 돌아가는 인민경제는 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군수와 연계된 국가경제는 버티지 못한다. 이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 이 대회에서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선(先) 핵무력 건설, 후(後) 경제 건설’을 결정했다.

올 연초 북한이 감행한 4차 핵실험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는 3월부터, 과거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6월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이 미국과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수백만 인권을 유린한 혐의로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조치가 김정은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압박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유학했던 스위스도 자국 내 북한 관련 자산

을 동결하고 기존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등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유럽연합(EU)도 북한 항공기와 선박의 EU 역내 통과와 기착, 기항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적인 독자 제재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충실히 이행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제재 이행으로 북한 국적 및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의 선박이 억류되는 한편 싱가포르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파견근로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고용계약 갱신을 불허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

으로도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난 4월 이후 핵탄두 운반로켓인 중거리미사일(4월 15일, 6월 22일, 7월 19일, 8월 3일, 9월 5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4월 23일, 7월 9일, 8월 24일)을 8회 연속 발사한 데 이어,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를 이뤄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핵 개발은 먼저, 경제 개발은 뒤에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집권한 김정은은 정권의 경제적 환경은 아버지가 집권할 때보다 양호했다. 김정일이 등극한 1994년은 대외적으로는 핵 문제와 사회주의권의 붕괴, 대내적으로는 경제난과 그에 따른 주민 이탈 등으로 정권 붕괴에 앞서 국가 붕괴가 우려되는 시기였다. 김정일은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 발전노선을 ‘경제·국방 병진’에서 ‘국방공업 우선’으로 전환하고, 경제부문 투자에 앞서 국방공업에 우선 투자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다.

반면 김정은은 아버지로부터 전쟁 억제와 방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핵과 미사일 같은 ‘혁명유산’을 넘겨받았으나 집권 초기엔 경제 건설에 집중할 수 있었다. 장성택 숙청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 기반의 공고화, 당의 유일영도체제 확립, 당과 내각의 역할 부각 등은 경제 건설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도 2400만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켜야 할 엄중한 과제가 제기되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첫 육성 연설에서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가져다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로부터 2개월 만인 6월 기업과 협동농장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신경제관리방법’을 제시하고 1년간 시범운행을 통해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포전담당책임제’로 정식화하고 전면인 실시 방침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한적 내부 개혁과 함께 2013년 5월에는 대외 개방을 위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11월에 13개의 경제개발구를, 2014년 7월에 6개의 경제개발구를 선포하는 등 경제 개발을 통한 경제 회생에 노력을 기울였



김영희 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북한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졸업. 2002년 탈북. 동국대 북한학 박사. 현재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저서 <무코와 북한사회 신체왜소의 정치경제학>, <탈북박사 부부가 새롭게 쓴 논문작성법(공저)> 등

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원산과 벨트로 묶어 ‘원산금강산국제관광특구’로 확대했고 2015년 2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 개발을 통한 경제 회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다. 김정은의 아이콘은 ‘경제 개발’이었다. 그러나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나이가 어린 그는 어리석게도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 핵 개발을 하면서도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4년간 경제 개발을 외치고 외쳤으나 진전된 것이 없다.

결국 김정은은 경제와 핵 개발 동시 추진은 절대 불가능함을 직시하고, 7차 당대회를 통해 걸으로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노선으로 강조했지만, 사실은 ‘경제보다 핵 개발을 우선하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기에 이른다. 김정은의 ‘선 핵무력 건설, 후 경제 건설’ 정책은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노동당대회에서 ‘인민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따라서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전략’은 매우 이례적이다. 계획과 전략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북한은 계획이 아닌 전략을 제시한 것일까?

북한에서 계획은 숫자로 표현되며 법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전략은 숫자가 아닌 선언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전략은 숫자가 아닌 기본과업이고 법적 성격을 갖지 않지만, 계획은 숫자로 제시되며 법적 성격을 가진 국가의 법적 과제다. 무조건 수행해야 할 당의 지령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계획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되기 때문에 전략의



북한의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에 북극성 미사일을 싣는 장면(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의 공식 경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군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간 경제와 분리된 군수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대북 제재가 절실하다.

무기의 질량적인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정량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데도, 북한은 조롱하듯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빈도를 높이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북한은 이미 대북 제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우려를 감안한 경제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것 같다. 그러나 대외무역 약화에 따른 시장의 영향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주민생활 악화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을 것이다.

아직은 대북 제재 초기 단계다. 일부에서는 초기에 강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점차 그 효율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재에 동참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대북 제재 초기인 4~7월 북·중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다. 중국의 수입금지 품목인 금광석의 대중 수출은 중국 상무부가 금수조치 세부 품목을 발표한 4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6월에는 마이너스 100%를 기록했다.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북·중 무역은 지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이 우회로로 선택하고 있는 봉사무역, 기술무역 부분인 인력 송출도 여건이 악화되면서 외화 수입의 축소도 예견되고 있다.

9월 현재 북한의 시장 물가는 다소 오름세를 보인다. 지난 4월 대북 제재 초기의 시장 쌀가격은 1kg당 평

● ● ●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고 대북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북한으로 외화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독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군 5073원, 5월 4966원, 6월 4900원, 7월 5300원, 9월 5418원으로 4월보다 6.8%(약 400원) 올랐으나, 전년과 대비하면 4월(4666원)과 7월(5283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6066원) 대비 올해 9월 쌀가격은 10.7% 낮은 수준이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9월 동안 1달러당 8200~8400원대에서 등락했는데, 올해도 8100~8400원대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올해 9월의 시장 환율(8216원)은 지난해(8260원)와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의 시장 쌀가격과 환율 변화는 대북 제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 시장의 쌀가격과 시장 환율은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년 동안 공고해진 북한의 시장이 그 어떤 외부적 요인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북 제재의 목적과도 부합된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북한 주민은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특히 민생과 관련한 품목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김정은에게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은 전면 차단하고,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재를 ‘투 트랙’으로 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북한의 공식 경제가 붕괴돼도 그것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공식 경제를 통해 물자를 공급받거나 가게소득의 대부분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 ‘스스로’ 살아가고 있어 북한 당국이 시장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 속에서도 지난 기간과 유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의 공식 경제는 군수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화학공업 부문인데, 이 부문은 대북 제재가 지속된다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 제재 초기 북한의 대외무역액 규모는 감소했지만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을 전면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고 대북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북한으로 외화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외화 소득원 차단해야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북한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보관하고 있던 2500만 달러와 대외무역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북한의 계좌 대신 개인 명의를 통해 거래했다. 외교행랑을 이용해 현금으로 북한으로 유입하는 등 불법적인 우회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화 소득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외화를 벌 수 있는 품목을 차단해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고 수출을 통한 외화 유입도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는 추가 대북 제재를, 한·미·일은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실효성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에 모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독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NUAC**



팜에서 날아온 미 공군의 B-1B 폭격기와 F-16 전투기의 편대비행. 유사시 한미 공군이 구성할 대규모 공격편대군(群)은 응징작전의 핵심이다.

북한 제5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

남북 사이에 ‘공포의 균형’ 유지돼야 한반도 비핵화 가능해

북한이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로 들어갔으니 우리는 새로운 세력균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포의 균형은 양측이 세력균형을 이루면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 다섯 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다. 네 번째 핵실험을 한 지 불과 여덟 달 만이다. 2006년부터 3년 단위로 해왔던 주기도 깨졌다. 미사일을 먼저 쏜 뒤 핵실험을 했던 패턴도 깨졌다. 핵과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로 주기나 패턴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지난 10년간 행해졌던 네 번의 핵실험과는 완전히 다르다. 네 번에 걸친 핵실험이 성능을 시험하는 초보적 실험이었다면 이번 실험은 핵탄두 폭발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핵무기의 시제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악한 수준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버전 1.0의 시제품이 만들어진 것만은 확실하다.

이 실험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이 이번 실험으로 핵탄두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점이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제는 핵탄두의 수제(手製) 생산을 넘어 연탄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뜻이다.

핵무기 대량생산으로 가는 북한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를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국정원이 국회 보고 과정에서 제6차,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38노스가 위성 판독 결과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징후들이 포착됐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맞는 말이다. 성능 향상을 위해 핵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미국과학자협회(FAS)에 따르면 최초 핵실험 성공 후 미국은 1032회, 구소련도 715회 핵실험을 했다. 이런 실험은 핵무기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실험이었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번 핵실험은 핵 실험 배치의 최종 단계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제4차 핵실험과 여섯 번째 장거리미사일이 발사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의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러자金正은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소망’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다. 핵미사일 기술이 얼마나 고도화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육사 33기, 서강대 정치학 박사, 국방대 교수, 국방대 국가안전보장군제연구소장,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 역임, 저서 <21세기의 세계질서 : 변혁시대의 적응 논리(공저)>, <국가위기관리 체제론> 등

됐는지를 차례대로 보여주었다.

그것도 유엔이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통해 대북 제재를 결의한 일주일 후부터 ‘특급비밀’을 하나씩 공개한 것이다. 북한은 3월 9일 기폭장치를 공개했다. 직경 60~80cm 크기의 구형(球形) 핵 폭발장치였다. 3월 15일에는 재진입 기술을 공개했다. 고열을 견디며 성공적으로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미사일 탄두였다. 3월 24일에는 고체연료 실험 장면을 공개했고, 4월 9일에는 신형 엔진을 공개했다.

한 달 동안 특급비밀을 공개한 북한은 이런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핵무기의 운반수단을 차례대로 발사하기 시작했다. 4월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해 4전5기 끝에 6월 22일 성공했다. 83도의 고각으로 발사된 무수단은 1413.6km의 고도까지 올라 400km를 비행했다. 정상적인 각도라면 팜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7월 19일, 8월 3일, 9월 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발사한 스킵드와 노동 미사일은 사거리 500~600km와 1000km를 보여주었다. 이동발사대에 실려 1분 간격으로 고속도로상에서 발사된 9월 5일의 세 발은 노동 미사일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고각과 연료량을 조절하면 부산과 김해공항이 타격지점이고, 제대로 쏜다면 일본과 주일 미군기지가 타격지점이고, 연속으로 발사하면 한미 양국의 요격미사일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패를 거듭하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도 4전5기 끝에 성공했다. 북한은 8월 24일 SLBM의 500km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 사회가 북한의 SLBM 지상 사출 실험 발사라는 정보를 들은 지 불과 1년 8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 ● ●

세력균형의 핵심은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 힘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한국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와야 한다.

발사를 결합해보면 뿌영던 안개가 완전히 걷히기 때문이다. 핵무기 시제품은 완성되었고 이를 실어나를 수 있는 무수단, 노동, 스커드, SLBM도 완성되었다. 이제 핵무기의 실전 배치만 남았다. 물론 수소폭탄의 실험이나 EMP의 실험, 또는 성능 개량을 위한 실험 등은 또 다른 실험일 뿐이다.

김정은의 마이 웨이

한국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하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국 순방에서 조기 귀국한 대통령 주재하의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의 내용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 통제 불능인 김정은의 정신상태, 그리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였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55개 국가들과 5개의 국제기구들이 북한 핵실험이 있는 지 하루 만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유엔 안보리도 규탄 성명을 발표하면서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 초 그러했듯이 긴 시간에 걸쳐 제재안을 논의하

게 될 것이고 결의안 2270호보다는 조금 더 강한 결의안을 내놓을 것이다.

한미 양국은 군사적인 조치도 발표했다. 북한 핵에 대한 3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3K'로 통칭되는 3축 체제의 첫 번째 축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공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이고, 두 번째 축은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이며, 세 번째 축은 적의 지도부를 대량 응징보복하는 KMPR이다.

새로운 것이 바로 KMPR이다. 군은 KMPR를 통해 '평양을 지도에서 들어내겠다'는 폭탄발언까지 했다. 미국은 전략무기를 전개했다. 바람 불어 뜨지 못했던 B1-B 폭격기 2대가 북 핵실험 나흘 만에 비무장으로 한반도 상공에 출현했다가 사라졌다.

무엇이 북한을 떨게 하는가? 무엇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포기의 길로 나오게 만드는가? 안보리 결의안도,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도, 미 전략자산의 전개도, 그리고 한국의 3K도 아니다. 이 정도로는 김정은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순방 중인 라오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2012년 7월 모란봉악단으로 하여금 부르게 했던 '고나 플라이 나우(Gonna Fly Now)'와 '마이 웨이(My Way)'를 막지 못한다.

새로운 공포의 균형을 찾아라

세력균형의 핵심은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 힘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 국제정치학의 거두인 왈츠는 세력균형이 국제협력, 국제법, 그리고 국제제도 등의 작동에 전제가 된다고 했다. 왈츠의 제자인 왈트는 세력균형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바꿔놓았다. 서로가 상대방의 힘에 대해 공포를 느끼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핵 강대국들은 공포의 균형을 통해 핵전쟁을 방지해왔다.

핵무기는 절대무기이자 전략무기이다. 대량살상무기이고 정치적 무기이기에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서 공포의 균형은 있을 수 없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한국 스스로 핵무

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와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제10조도 '비상사태로 인해 국익이 위태롭게 될 경우 탈퇴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NPT 탈퇴는 북한의 탈퇴와는 완전히 다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오히려 NPT 탈퇴를 한 후 23년 이상 핵무기를 개발해왔지만 한국은 현재 비상사태를 맞고 있기에 그렇다. 한국이 비상사태에 처한 걸 국제사회가 부인할 리 없다. 차선책으로 미국이 나토(NATO)의 5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듯이 한국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바람 불어 뜨지 못하는 폭격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한 사이에 공포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도 가능하고 남북 협력도 가능하며 통일 논의도 가능해질 것이다. 왈츠나 왈트의 주장처럼 세력균형 유지가 모든 협력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으르렁거렸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 산적했던 갈등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단호한 정책 결정이 오히려 한반도에 기존과는 전혀 다른 희망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NUAC**



◀북한이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거듭한 함북 풍계리 지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킬체인과 KAMD 외 대량응징 보복을 하는 KMPR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임호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그러나 그것으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다.



북한 엘리트의 탈북이 주는 의미

김정은의 요인 숙청이 불러온 새 현상 ‘일시적 탈북’에서 ‘구조적 탈북’으로

공포정치의 일상화가 구조화된 탈북을 만든다. 하늘로 미사일을 쏘아 올릴수록 그 밑에서는 인민의 유출이 일어난다. 김정은은 사상누각으로 전진하고 있다.



2012년 중국 투먼에서 북한 함북 온성을 잇는 다리로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차량이 찍혔다. 북한은 지금 탈북자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올해 7월 말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탈북해 국내로 망명했다. 태영호 공사는 1991년 귀순한 콩고 주재 북한대사관 고영환 1등 서기관, 1997년 미국으로 망명한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 이후 외교관으로서는 최고위급에 해당한다.

특히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경우 유럽지역 북한 외교의 중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태영호 공사의 위상은 높은 편이다. 북한의 대사관 체제에서 공사 직위는 해당 기관의 정치적 관리책임자인 초급 당비서 역할을 겸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대사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태영호 공사의 부인 오혜선은 김일성의 동료이자 빨치산인 오백룡의 아들인 오금철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의 일가로 알려지고 있다. 태영호 공사 일가의 망명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이다.

다시 증가하는 국내 입국 탈북자

태영호 공사의 망명뿐만 아니다. 지난해에는 한국군의 대령에 해당하는 인민군 경찰총국의 대좌가 귀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올해 7월 중순 홍콩과학기술대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 출전한 북한의 수학 영재가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거액을 소지한 북한의 해외 무역 일꾼도 탈북해 이미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경우 고위층의 탈북은 물론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북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북한 중산층 이상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심화와 관련이 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로 해외 파견 인력의 탈북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이 부족한 외화의 수급을 위해 해외 파견인력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파견인력의 탈북은 과거 소수에 불과했으나 올해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에서 보듯 최근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탈북자 중 여성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엔 남성 탈북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사회학 박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평가위원,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역임. 현재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사무처장. 저서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 <지속 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등 다수

북한 내에서 여성의 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남성은 직장 및 정치, 사회적 통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동에 제약이 있어 탈북도 제한을 받는 편이다. 그동안 국내 입국 탈북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이다. 최근 남성 탈북의 증가 경향은 북한 체제의 내구력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탈북해 곧바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직행형 탈북’도 증가하고 있다. 탈북은 경제난민 성격의 ‘생계형 탈북’과 ‘정치적 탈북’으로 대별된다. 생계형 탈북의 경우 중국 등 북한과 인접한 국가로 월경해 일정 기간 경제활동 및 거주 후 국내로 입국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에 입국한 상당수 탈북자가 이와 같은 경로를 경유했다.

반면 정치적 탈북의 경우 처음부터 한국 및 제3국으로의 망명을 목표로 한 기획 탈북이라는 점에서 해외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직행형’의 특성을 보인다. 최근 직행형 탈북의 증가는 정치적 목적의 탈북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감소세를 보여온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올해 증가세로 반전했다. 2009년 2914명이었던 탈북자는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79명, 2015년에는 1276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탈북자 수가 증가세로 반전돼 7월 말 현재 815명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그동안 탈북자 수의 감소는 북한 내 배출 요인의 감소가 아니라 통제의 강화에 기인한다. 김정은 정권이 탈북을 심각한 반체제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거주지 이탈과 노력 동원을 담당하는 ‘3.12상무’를 재가동해 탈북을 집중 감시·통제하고 있다. 북한에서 상무는 태스크포스에 해당하며, 3.12상무



탈북은 ‘생계형 탈북’과 ‘정치적 탈북’으로 대별된다.

생계형 탈북은 중국 등 인접 국가로 월경해 일정 기간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다 국내로 입국하는 것이다.

정치적 탈북은 직행하거나 제3국을 우회하는 기획 망명이다.

최근 직행형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는 2014년 3월 12일金正은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3.12상무가 북한 공안기관의 핵심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직할이라는 점에서 탈북에 대한金正은 정권의 우려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의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및 국내 입국에 대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金正은이 직접 재외 한국인들에 대해서 보복 납치 및 테러를 지시한 이유도 탈북 사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직행형 탈북’金正은 정권의 불안정성 입증

북한 고위층 및 남성의 탈북, 해직 파견인력의 탈북, 그리고 ‘직행형’ 탈북의 증가는 북한 체제 내구력의 약화와金正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양적, 질적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는 탈북 양상은金正은 집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공포정치와 구조적인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엘리트 탈북의 증가는金正은의 지속적이고도 무차별적인 고위층에 대한 숙청 및 처형과 관련이 있다.金正은은 2011년 말 집권 이후 반년 만인 2012년 7월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상징이자 북한 야전군의 최고 실세인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를 전격 숙청했다. 리영호의 경우 해임이라는 형식을 취했으며, 북한 공식 매체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처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3년 6월 발간된 북한 내부 학습자료인 학습제강에 리영호를 ‘반당반혁명분자’, ‘놈’이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반당반혁명분자로 낙인 찍혀 살아남은 경우는 거의 없다. 이뿐만 아니라金正은은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잔혹하게 처형함으로써 대내외에 충격을 주었다.

金正은 정권에서 자행된 북한 고위층에 대한 숙청과 처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북한

고위층에 대한 숙청 및 처형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5년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올해 7월에는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학습제강에 의하면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 전정갑 서해함대 제1전대장, 정운학 노동당 중앙위원회도 숙청 혹은 처형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金正은 정권에서 처형된 고위층은 모두 반당반혁명분자라는 죄명을 뒤집어썼다. 북한 고위층 모두가 예기치 않은 숙청과 처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매년 일반 주민 30여 명 공개처형

金正은의 공포정치는 고위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등金正은의 공포정치를 지탱하는 북한의 공안기관들이 고위직의 숙청과 처형은 물론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시와 통제, 처벌을 주도하고 있다.

金正은 집권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30여 명의 주민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일반주민에 대한 처형 빈도가 급격히 증가해 8월 현재 60여 명의 북한 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탈북자와 가족, 관련 브로커가 수시로 처형되고 있으며, 해외 송출 노동자의 근무 중 이탈도 탈북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탈북, 남한 및 외부 영상물 시청, 선교 활동은 모두 심각한 반체제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고 있다.

공포정치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경제위기 역시 최근 탈북 증가세의 주요한 원인이다.金正은 정권 출범 이후 5년 만에 식량난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9% 감소했으며, 북한 최대의 곡창지대인 황해도 주민들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군 역시 식량난에 직면해 일부 북한군의 경우 불과 하루 100g의 식량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 제재의 강화로 북한의 재정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장마당 경제의 활성화도 재정 수입의 확대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장마당 거래의 외화 의존성 심화와 시장 활동의 음성화, 그리고 소비세 등 시장제도의 미비로 세수 증대와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엘리트 탈북의 증가는金正은 정권의 불안정성 심화와 북한 체제의 내구력 약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金正은 정권의 통제와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엘리트층은 물론 전반적인 탈북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거침없는 핵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金正은 정권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이다. **NUAC**



사형 선고 받는 장성택. 장성택 처형이 고위층의 구조적 탈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 초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 거주 북한 식당 종업원들.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탈북이 높은 편이다.

2014년 영국에서 촬영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태씨를 비롯한 북한 고위급의 정치적 탈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 사정 때문이다.(왼쪽부터).



지난 4월 24일 수중 사출 후 점화에 성공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왼쪽, 노동신문 사진), 8월 24일 '북극성'이 발사돼 500km 이상 비행에 성공하자金正은이 현장 관계자를 껴안고 기뻐하고 있다(조선중앙TV 화면).

‘단 한 발로 결정짓는’ 북한 SLBM 위협

4전5기 만에 등장한 ‘게임 체인저’

고체연료 탑재와 장거리 비행에 성공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과 더불어 커져만 가는 이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ㅣ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ㅣ

북한이 지난 8월 24일 최대 사거리 2500km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시험 발사에 사실상 성공함으로써 북한의 SLBM 위협과 그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SLBM 개발 성공은 군사 상식과 군 당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내년 사이에 실전 배치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시험 발사 당시 북한 SLBM이 실제 비행한

것은 500km 정도다. 외형상 이전의 최대 비행거리 30km(2016년 4월)에 비해 크게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상적인 비행궤도보다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정상 비행 최고고도 400km보다 훨씬 높은 500km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군 당국은 이를 근거로 정상 비행궤도라면 이 미사일이 1000km를 날아갈 수 있고, 고체연료를 더 채워넣으면 최대 2500km 안팎을 비행할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시험 발사 성공에 필수적인 단(段) 분리에도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 SLBM은 원래 액체연

료를 썼지만 지난 4월 고체연료로 바꿔 30km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안정적이어서 물속의 SLBM용으로 적합하다.

8월 시험 발사에서 북 SLBM은 4월 발사 때보다 강력한 화염을 안정적으로 내뿜어 고체연료로의 전환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지난해 이후 SLBM 시험 발사를 다섯 차례만에 성공해, ‘5전6기’ 기록을 세운 무수단 미사일처럼 ‘4전5기’ 기록을 세웠다.

현재 북한의 SLBM은 ‘실전 배치’라는 고지의 9부 능선 이상을 넘은 것으로 분석된다.

SLBM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우리의 ‘킬 체인(Kill Chain)’을 무력화해 우리 군을 속수무책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다. 현재 북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그린 파인’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는 북쪽을 향해 있어, 북 잠수함이 우리 ‘뒤통수’에 해당하는 동남해나 남해로 침투해 SLBM을 쏠 경우 그대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평상시에는 북쪽에서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을 것이라, 북한이 동해 북쪽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는 한 요격할 수 없다.

北 SLBM 발사는 사드 배치를 정당화해

지난 8월 북한이 쏘아 올린 SLBM은 최대 마하 10(음속의 10배)가량의 속도로 낙하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요격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PAC-3 미사일은 마하 5~6 정도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는 최대 마하 14~15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최대 사거리 3500km) 및 SLBM 발사를 통해 역설적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에 따라 북한이 언제, 얼마나 많은 SLBM을 실전 배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 건조 및 운용 능력에 좌우된다. 북한은 우선 2000톤급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에 이 미사일 1발을 실어 이르면 올해 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SLBM은 보통 6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에 10발 이상 탑재해야 전략적 의미를 갖는데, 북 SLBM은 군사 상식을 깨는 것이다. 신포급은 크기가 작아 선체 가운데에 1발을 겨우 탑재한다. 우리나라나 서방세계 기준으로 보면 실전 배치형은 될 수 없고 시험함의 성격이 강하다. 크기가 작아 안전성과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물속에서 SLBM을 콜드 런치 방식으로 밀어 올릴 때 상당한 고압의 가스(증기)를 사용하는데 그때의 충격으로 잠수함이 흔들리고 내려앉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보통 2000톤급 이하의 소형 잠수함에는 SLBM을 탑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단 한 발만 신포급 미사일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일종의 ‘일격필살(一擊必殺)’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金正은은 북한 건국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SLBM 수직발사관을 2, 3기 갖춘 신형 잠수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일본 방위백서 등에 따르면 북한은 잠수함, 잠수정을 총 78척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옛 소련이 북한에 매각한 배수량 3500톤급 잠수함을 분석해 얻은 기술로 SLBM을 여러 발 쏠 수 있는 새 잠수함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구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고철로 도입한 뒤 이를 토대로 이번에 SLBM을 발사한 신포급 잠수함을 건조했다. 골프급은 수중배수량 3500톤, 길이 98m로 신포급(길이 67m)보다 크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북한 잠수함 건조 능력을 봤을 때 김정은의 지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북한은 이미 1970~80년대 구소련의 로미오급 잠수함 18척가량을 독자적으로 건조한 경험이 있다. 로미오급은 수중배수량 1800톤급으로 현재 북한 잠수함 중 주력으로 23척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보다 작지만 침투용으로 적합한 상어급 소형 잠수함(280~300톤급), 연어·유고급 잠수정(80~130톤급)도 각각 독자 건조했거나 건조 중이다.

북한 잠수함과 SLBM 전력 확충에 대한 우리의 치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NUAC**

다시 읽는 <징비록(懲毖錄)>

잔인한 왜군, 포악한 명나라군 사이에서 조선을 ‘간신히’ 지킨 류성룡의 피울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됐음에도, 중국의 압박을 두 눈으로 보고 살게 됐음에도 내 땅에는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을 벗지 못하는 우리는 <징비록>을 다시 읽어야 한다.



이순신을 천거해 나라를 구한 류성룡 초상화.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는 가공할 만한 사태의 심각성에 둔감한 것 같다. 북한은 5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닷속 잠수함이나 터널, 열차 등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비대칭적 공격이므로 <손자병법>에 따르면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 적의 실정은 물론 아군의 전력까지 모르고 싸운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설마 주의’에 빠져 있다. 또 ‘누군가(미국, 중국)가 지켜줄 것이다’라는 사대주의도 팽배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정신도 실종됐다. 내 뒷마당에는 사드 등 군사시설을 절대 배치할 수 없다는 님비 현상도 만연해 있다. 북한의 핵 개발 목표는 적화통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총리 처칠은 “평화는 공포의 자식”이라고 했다. 평화를 원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극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 안위에 대한 오판은 상상 이상의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전에 통신사로 일본에 간 황윤길(서인)과 부사 김성일(동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명가도(征明假道, 명나라를 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 요청을 놓고 당파적 시각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가 미증유의 참상을 불러일으켰다. 국토는 쑥대밭이 됐고, 피가 냇물처럼 흐르는 대참극이 벌어졌다.

오늘날 실질적으로 북핵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에 식량과 석유를 공급해주는 중국뿐이다. 그러나 일당독재 공산국가인 중국이 가장 꺼리는 것은 한반도가 대한민국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민주국가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대를 마주하는 시나리오를 두려워한다. 따라서 완충 역할을 하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이순신을 등장시킨 불차탁용(不次擢用)

중국의 통치철학은 1911년 이종오(李宗吾)가 <초한지>의 처세술을 정리해놓은 ‘후흑학(厚黑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얼굴은 두꺼워 뽐뽐하고 검은 속내는 음흉하다’는 후흑학은 동양의 마키아벨리즘이라고도 불린다. 힘을 기를 때까지 납작 엎드리는 도광양晦(韜光養晦),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태평양에서 미국, 일본 및 주변국들과 대치하는 등 거침없는 협박인 돌돌핍인(咄咄逼人)은 그와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은 1950년 ‘미군을 물리치고 조선(북한)을 돕는다’는 항미원조(抗美援朝) 기치를 내걸고 중공군 50만 명을 보내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았다. 중국은 1961년 북한과 조·중 우호조약을 맺어 북한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동 개입하는 연계선도 마련해놓았다.

1591년 2월 13일 이순신은 정읍현감(종6품)에서 무려 7단계를 뛰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정3품)가 된다. 왜란의 조짐이 심상치 않자 선조는 계급에 구애 없이 유능한 장수를 선발해 전방에 배치하는 ‘무신불차탁용(武臣不次擢用)’을 지시했다. 그때 우의정 류성룡이 이순신을 수군장수로서 발탁한 것은 참으로 천행이었다. 임진왜란 발발 1년 2개월 전에 전라도 여수에 부임한 이순신은 관하 5관(순천, 홍양, 광양, 낙안, 보성), 5포(사도, 여도, 녹도, 방담, 발포)의 군선과 군기, 군량을 점검하고 군사훈련을 시켰다. 지자·천자총통을 탑재하는 비장의 첨단무기인 거북선을 창제해 돌격선 임무를 맡겼다. 탐



김동철 이순신 인성리더십 포럼 대표
명지대 교육학 박사,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월간중앙 기획위원,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강의 교수, 명지대 및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 등 역임. 저서 <환생 이순신 다시 쓰는 징비록>, 블로그 yisoosshin-humanleader.tistory.com 운영

망 정보전에 능하고 선승구전(先勝求戰, 이길 방도를 마련해놓고 싸움)의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한 이순신은 23전 23승이라는 연승무패를 기록해 세계 해군사에서 ‘군신(軍神)’ 반열에 올랐다.

1592년 4월 13일 선발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 등이 이끄는 왜군 15만8000여 명이 줄줄이 부산포에 상륙했다. 조총(鐵砲, 뿔포)부대를 앞세운 왜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해 ‘무(無)뿔포’의 조선군을 살육하며 20일 만에 한성에 무혈 입성했다. 4월 30일 한양을 버리고 몽진에 나선 선조는 5월 8일 평양, 7월 3일 의주에 도착했다. 그리고 여차하면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에 망명할 뜻을 밝혔다. 뿔속까지 존명사대 정신으로 가득하던 선조는 사신을 급파해 원군을 요청했다. 7월 10일 명나라 조승훈(祖承訓)이 이끄는 5000명의 선발대가 압록강을 건너와 17일 평양성을 공격했으나 왜군이 가진 조총의 위력만 실감하고 요동으로 퇴각했다. ‘천군(天軍)’ 이랍시고 부린 만용의 결과였다.

선조는 명나라 조정에 재차 파병을 애걸복걸했고, 그에 따라 1593년 1월 7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이끄는 본진 5만 명이 ‘항왜원조(抗倭援朝)’의 기치를 내걸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왔다. 그리고 패장 조승훈(부총관)과 도체찰사 류성룡이 이끄는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함락했다. 명군은 불랑기포, 멸로포, 호준포 등 서양식 화포를 발사해 평양성을 타격했다. 승기를 잡은 이여송은 여세를 몰아 개성을 거쳐 벽제까지 남하했다. 그러나 1월 27일 고양의 여석령에 매복해 있던 왜군의 기습을 받아 벽제관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혼비백산, 겁을 잔뜩 집어먹은 명군은 개성으로 물러났다가 멀찌감치 평양으로 후퇴했다.

그때 ‘전시 재상’ 류성룡이 이여송에게 후퇴해서는 안되며 전열을 정비한 후 한양의 왜군 총본부를 쳐부수야



KBS에서 방영한
'징비록'의 한 장면.

한다고 간청했으나 소귀에 경 읽기였다. 이여송은 “군사와 말먹이를 준비하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전투냐”며 류성룡을 무릎 꿇리고 군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

명나라가 조선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임진왜란은 군량 전쟁이었다. 1592년 7월에 파병됐다 다가 패하고 돌아간 조승훈 군대 5000명에게 보급한 한 달 치 식량은 4500석, 뒤이어 나온 이여송의 군대 5만 명에게 배당된 1년 치 군량은 무려 50만 석이었다. 당시 조선의 총 세입이 60만 석이었으니 이렇게 많은 군량을 조선은 마련할 수가 없었다. 군량 마련으로 백성들은 죽어났다. 1594년에는 백성 사이에서 서로 잡아먹는 ‘인상식(人相食)’이 횡행했고 전염병이 돌았다. 7년 전쟁 내내 군량 동원에 동분서주했던 류성룡 대감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

조승훈 군대의 1차 평양성 패배로 왜군 세력이 만만치 않음을 간파한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石星)과 조선에 파견된 경략(총지휘관) 송응창(宋應昌)은 무리배 출신인 유격대장 심유경(沈惟敬)을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보내 평양 강북산에서 강화협상을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1592년 9월 1일부터 50일 동안 휴전협정을 맺기로 했다. 그리고 이여송이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하자 1593년

4월 8일 용산에서 두 번째 회담이 열렸다.

1593년 6월 28일 진주성 2차 공방전 중에 강화 교섭차 명나라 사신 사용재(謝用梓), 서일관(徐一貫)과 함께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일본 규슈의 나고야(名護屋)성에 갔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사신에게 화건 7조(和件 七條)를 제시했다. 그 속에는 ‘조선 8도 가운데 북 4도와 한성은 조선에게 돌려주고 남 4도(경기, 충청, 전라, 경상)는 일본에 할양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당시 명나라는 황제(신종)의 무능과 환관의 전횡, 이민족의 발호 등으로 재정이 고갈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했다. 조선의 북쪽 땅을 요동 방어의 울타리로 삼는 번리지전(藩籬之戰)으로 처리할 심산이었다. 일본은 전쟁을 확대하지 않고 조선 남부 4도를 할양받아 조선 지배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었다. 군량 조달과 조선 땅의 분할 저지에 목숨을 걸었던 류성룡은 “우리 강토의 땅은 한 자 한 치도 왜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땅을 치고 울부짖었다.

1594년 4월 명의 황제 특사인 선유도사 담종인(譚宗仁)은 ‘왜군을 절대 토벌하지 말고 조선군을 모두 해체해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금토파문(禁討牌文)을 이순신 앞으로 보냈다. 거만한 자세로 왜군을 앞보던 명군은 왜군과 15차례 싸웠지만 제2차 평양성 전투를 빼고는

모두 패배했었다. 그런데 바다 싸움은 전혀 달랐다. 연전연승하는 이순신의 수군을 붙들어매지 못하면 강화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은 명약관화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에 이순신은 통분함을 감추지 못하고 담종인에게 ‘답담도사종인금토파문(答譚都司宗仁禁討牌文)’이란 항의서를 보냈다. ‘단 한 척의 적선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편범불반(片帆不返)’의 정신이 충만했던 이순신은 목숨을 걸고 명 황제의 지시에 분연히 맞선 것이다. 1593년 2월 도원수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대첩을 거두자 송응창은 권율에게 패문을 보내 왜와 싸워 이긴 것을 질책했다. 그해 6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조선군이 참패하고 모든 백성들이 도륙당했지만, 그는 사신 심유경을 왜군 진영으로 보내 왜군의 만행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게 했을 정도였다.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이상한 전쟁이었다.

명나라는 조선을 위기에서 구했다는 ‘재조지은(再造之恩)’을 강조하며 내정 간섭을 일삼았고, 사신들은 온갖 뇌물을 요구했다. “의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수천 리에 은과 인삼이 한 줌도 남지 않았고, 조선 전체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다”고 <선조실록>은 전한다.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던 류성룡이 얼마나 미웠는지 1593년 4월 명군의 총병(總兵) 사대수(查大受)는 류성룡의 군관 사평(司評, 정 6품) 이충이 왜군을 사살했다며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정유재란 때 명나라 제독 진린(陳璘)은 사로병진작전(四路竝進作戰)에 따른 수로군(水路軍) 대장으로 1598년 7월 16일 전남 완도의 고금도에 도착해 이순신의 수군과 합류했다. 진린의 임무는 통제사 이순신과 함께 서로군(西路軍) 대장 유정(劉綎) 제독과 도원수 권율의 육군과 연합해 순천왜성에 웅거하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를 사로잡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니시의 끊임없는 뇌물 공세로 유정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 퇴각했고, 역시 뇌물을 받은 진린도 “퇴각로를 열어주자”고 하다가 이순신의 간곡한 청에 마지못해 9월 16일 노량해전 때 조·명 연합수군함대를 결성했다.

진린이 고금도에 내려온 지 3일 만에 벌어진 절이도 해전에서 그의 패악한 본색이 드러났다. 이순신이 처음

겪은 진린에 대한 장계가 <선조실록> 1598년 8월 13일자에 기록돼 있다. “멀리서 적선을 바라보고는 원양(遠洋)으로 피해 들어간 진린은 우리 군사들이 참획한 수급을 보고 그 관하(管下)를 꾸짖어 물리치고 이순신에게 공갈 협박을 가하여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순신이 마지못해 40여 급을 나눠 보내주었다. 또 계유격(季遊擊)에게도 5급을 보냈다.”

진린의 명군은 조선 수군에게 행패를 부리고 백성들을 약탈했다. 참을 수 없었던 이순신은 진린에게 “백성들과 함께 떠나겠다”고 하자 진린이 만류했다. 그때 이순신은 “귀국의 군사들이 나를 속국의 장수라 하여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 내게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준다면 서로 보존할 도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여 진린의 승낙을 얻어냈다.

‘망전필위’ 교훈 잊고 또다시 당한 정유재란

류성룡(남인)의 피맺힌 절규인 ‘망전필위(忘戰必危,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의 외침을 당색이 다른 중신들은 귀 밖으로 흘려보냈다. 왜란이 끝난 뒤 우리 민족 특유의 급망증(急忘症)이 도져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태평무사하다가 30년도 안 돼 북쪽 오랑캐인 여진으로부터 두 차례 침범(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을 당하고 말았다. 그때 끌려간 여성이 50만 명이 넘었고, 남은 백성들은 콩가루가 됐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류성룡은 북인으로부터 주화오국(主和誤國), 즉 일본과 화해를 주도해서 나라를 망쳤다는 탄핵을 받고 삭탈관직당한 뒤 고향 안동에 내려와 <징비록(懲毖錄)>을 피와 눈물로써 집필했다.

“예기징이비후환(豫其懲而毖後患,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함), 지행병진(知行竝進, 알면 행함)함이 곧 유비무환(卽有備無患, 대비하면 화를 당하지 않음)이다.”

류성룡은 한양 건천동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이순신이 장군이 될 인재임을 일찍이 알아보고 난세에 ‘위대한 만남’이란 인연을 맺었다. 그의 ‘징비정신’은 이순신의 선공후사(先公後私), 임전무퇴(臨戰無退), 필사즉생(必死卽生)과 백의종군 후의 살신성인(殺身成仁)과 그 맥을 같이한다. **NUAC**



권태오 사무처장

“갑자기 찾아올 통일 위해 ‘통일은 내 손안에’ 인식 확산해야 할 것”

지난 7월 8일 권태오 전 육군 수도군단장(사진)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38년간의 군인 임무를 마친 지 2년 만에 다시 정부직을 맡은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엄중한 시기에 국가의 부름을 다시 받아 매우 영광이지만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의 통일 생각을 들어보았다.

사무처장에 취임한 지가 2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살펴본 민주평통 활동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민주평통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취임 직후 바로 국회에서 전년도 결산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일주일을 국회에서 보냈습니다. 민주평통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지역 단위에서 추진한 통일 활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안을 청취했고, 민주평통의 주요 사업과 자문위원의 활동에 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기기는 하지만 민주평통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평통은 국민의 통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 통일운동의 중심체입니다.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통일·대북 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와 이해 확산을 통해 실천적인 통일 준비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1월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안보 상황이 여의치 않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통은 통일·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론 결집에 관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자문위원들이 국민들에게 북한 핵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린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된 것도 해외 자문위원들이 현지의 주류사회와 정치권에 호소한 결과라고 봅니다.”

제17기 민주평통은 ‘국민 속에서 선도적인 통일 준비를 추진해나간다’는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공감’과 ‘국민동행’, ‘국민결집’이라는 중점 과제를 실천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에 집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통일 준비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키우고 통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통일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통일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된 여론을 토대로 실천적인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통일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민족이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결집하는 데 민주평통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활동도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하게 될 때 진정성을 갖게 되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습니다. 결집된 국론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젊은 층 통일 무감각 우려스러워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이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특히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난 6월 민주평통이 실시한 국민 통일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4.4%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1%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7.7%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북한의 대남 도발 책동과 협박 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20대는 32.6%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청년층의 통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일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년들의 이런 인식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럴수록 국민들이 통일이라는 주제를 쉽고 흥미롭게 접근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통일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민주평통 브랜드로 자리 잡은 ‘청소년 통일골든벨’과 같은 명품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최근 서점에 가보면 통일 관련 전문서적은 있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통일 관련 서적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의 주역이 될 젊



“기본과 규정을 근거로 자문위원 활동 지원하겠다” 밝힌 권태오 신임 사무처장.

은이들의 취향에 맞게 웹툰과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봐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어 남북이 서로 왕래하는 상상, 통일 후 벌어질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모아 웹툰으로 만든다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런 상상 속의 통일된 세상이 언젠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사명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공격용 핵무기를 현실화한 지금, 우리 정부의 가장 믿음직한 힘은 국민의 지지

든 ‘통일’을 접하게 하고 말하게 해야 합니다. ‘통일은 내 손안에’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소리 소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놓고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일·안보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올해 들어 북한은 두 번이나 핵실험을 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무수단·노동 미사일 등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수십 차례 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인 그들이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격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방어수단이 중요합니다. ‘방어가 최상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마지막 자위수단입니다. 국

와 결집된 국론입니다. 북한의 위협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역시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민주평통은 북한 핵의 위협성과 국민의 단합이 필요한 때임을 알리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회를 가졌으며, 해외 언론 기고와 주류 사회 인사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핵 폐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북핵 포기과 핵실험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제대로 추진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해 민주평통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자문위원들은 어떤 역할,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엄중한 안보 위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하나가 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신뢰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는 등 국론이 분열돼 있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 제재도 강력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평통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2만여 자문위원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각종 논란을 불식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대북정책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활동과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규정·목적에 맞게 통일 사업 추진해야

민주평통 사무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처 구성원에게 전하는 당부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취임 첫날부터 사무처 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이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업무처리’였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민주평통에 주어진 역할 수행과 관련한 각종 규정의 정비와 감사기능의 강화입니다. 2만여 명의 자문위원을 관리하는 것은 2만여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자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해 불편함이 없게 하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정비된 규정과 그에 근거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자문위원의 통일 활동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기능을 활성화해 추진한 사업과 업무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통일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통일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유사 사업을 정비해야 합니다. 일회성이고 기억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은 지양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멀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로 가는 한 배를 탔습니다. 통일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 맞게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선장이 바뀌어도 통일로 가는 항로는 바뀌지 않게 해야 합니다.” **NUAC**



“2만 자문위원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논란을 불식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대북정책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23년 전 남아공에 정착한 황재길 협의회장은 14기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17기에 아프리카협의회장 직을 맡게 되었다.

황재길 아프리카협의회장

아프리카에 심는 평화통일의 힘!

남아공을 비롯해 21개국이 소속된 민주평통 아프리카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황재길 협의회장. 그는 탈북민 강사를 초청해 교민과 현지인 대상 강연회를 여는 등 머나먼 땅에서 통일 활동과 우리 역사 익히기 등을 적극 펼쳐고 있다.

아프리카협의회 사업 내용은 그 어느 해외협의회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다양하고 알차다. 지난해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와 케이프타운 등지에서 개최한 통일·북한 바로 알기 서바이벌 대회, 올 6월 남아공과 보츠와나 등에서 9회에 걸쳐 진행한 탈북민 초청 북한 실상 알리기 강연회,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한 ‘북한 실상 사진전’ 등이 그것이다.

호응도 상당했다.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청해 2주 간에 걸쳐 진행한 강연회에 많게는 500명의 교민과

현지인이 모였다. 북한의 인권과 경제 실상 등을 보여주는 사진 250여 점을 공개한 사진전 역시 600명이 넘는 이들의 발길을 이끄는 등 성황을 이뤘다. 아프리카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볼 때 쉽지 않은 규모이자 성과다.

아프리카 대륙은 넓다. 중국과 미국, 유럽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땅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단일 협의회로서 가장 넓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반면 교민 수는 적다. 2만 명 정도다.

“이렇게 드넓은 지역에 교민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 이동시간과 교통 사정 등이 여의치 않아 자문위원 워크숍 같은 모임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부, 서부, 남부 세 지역별 지회장님들이 비디오를 통해 지역 활동을 공유하고 순회 활동을 가지며 열심히 협업하고 있죠. 지회별 사업 경비를 자비로 충당해가며 봉사하는 고마운 지회장님들입니다.”

황재길 아프리카협의회장 자신도 22년 전 남아공에 첫발을 디딘 이래 현재까지 내내 봉사의 삶을 살았다. 요하네스버그에서 휴대전화 액세서리 및 전자제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황 회장은 2011년부터 4년 넘게 현지 노숙인들을 상대로 사재를 털어 무료 급식 봉사를 해왔다. 20여 년 전부터는 우간다 쿠미대학에서 아프리카 청년들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하는 장학제도를 후원했다. 이웃 나라인 보츠와나에 기술학교를 세우는 데도 한 몫하는 등 봉사 DNA의 뿌리가 깊은 이다.

현지인과 교민 아우르는 ‘한국 알리기’ 펼쳐

또한 2000년부터 한글학교 교장을 맡아온 그는 우리 교포들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남아공에는 우리 교민이 약 4000명 거주하고 있는데, 남아공 출신으로 한국에 가서 영어교사를 하는 사람들 숫자 역시 4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우리 한글학교 출신이 많기에 한국·남아공 친선 모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활

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활동도 이 같은 꾸준한 봉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14기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17기에 아프리카협의회장 직을 맡은 그는 “처음에는 민주평통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채 임무를 맡았으나 갈수록 통일 사업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한다.

그는 민주평통 사업을 해오면서 통감하고 있는 것은 ‘부모 세대들이 차세대 젊은이들의 국가관 교육에 소홀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와 국가 정체성 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확고한 국가관을 갖는 건 국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야 국가가 활력을 얻고 발전의 원동력을 갖죠. 우리 청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모두 우리 세대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의 일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같은 책임감 속에서 그는 향후 아프리카협의회 사업 프로그램을 차곡차곡 구상하고 있다. 통일골든벨 등의 상시적 행사 외에도 아프리카 청년집회(Costa Africa)나 한글학교 수업, 청소년 집회 등을 통해 통일이라는 과제에 대한 사명감을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려고 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픈도어선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알리기와 모금 활동도 떠나갈 계획이다. **NUAC**



◀북한 실상 사진전에서 교민과 현지인들에게 사진 설명을 하고 있는 황재길 협의회장.
▶2016년 통일골든벨 행사장에서 펼쳐진 통일 염원 풍선 날리기.





1 한국 대학생과 반별로 나눠 토론하는 재일동포 청년들(서울 올림픽파크텔). 2 젊은이의 활기로 하나 된 자이니치와 한국 대학생. 3 한반도 상태에 대해 특강을 한 유호열 수석부의장. 김정은이 처형한 북한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2016 재일동포 청년 모국방문 연수

짧은 만남, 긴 여운 ~ ‘자이니치’들의 뿌리 찾기와 한반도 이해하기

분단과 한류, 한국과 일본, 전쟁과 평화를 2박3일간(9월 22~24일) 짧게 경험하는 재일동포 청년들의 모국 방문.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 돌아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한국 전도사가 될 것인가.

역시 청년은 청년이었다. 착하고 건강하지만 의식은 치열하지 못하다.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명강사이지만 그래도 조는 이는 막기 어렵다. 3, 4대를 거치며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계는 국적을 불문하고 ‘자이니치(在日)’로 불린다. 이들을 담고 있는 그 유명한 조직 중 하나가 바로 ‘민단’이다.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최근에 일본에 간 이들은 ‘재일한국인’으로 불리는데 이들은

자이니치와 섞이지 못한다.

연설 도중 유 부의장이 “내가 하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이라고 물으니, 5%가량 손을 살짝 들었다. 이들은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으니 한국어에 서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2016 재일동포 청년 모국 방문 연수’는 전부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그런데도 일부 청년들은 존 것이다. 유 수석부의장이 반응이 적은 그들

을 향해 조크를 던졌다.

김정은이 총살시킨 북한 요인 9명을 거론한 뒤, “이 중에는 졸았다는 이유로 처형된 이도 있다. 서울에서는 몰라도 평양에서는 절대 졸면 안 된다”라고 한 것. 한국인 도우미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자이니치들은 반응이 없었다. 통역사가 순차 통역을 해주자 일부만 미소를 지었다. 아, 이들은 장성택도 모를 정도로 한반도 문제에 문외한이구나...

자이니치는 대일항쟁기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8·15 광복 후 그대로 눌러 산 한국인이 뿌리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자 이들은 혼란에 빠졌다. 남(南)을 택하면 ‘민단계’, 북을 고르면 ‘총련계’가 되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조선계’가 된 것이다. 1964년 대한민국이 일본과 수교하자 민단계는 한국 국적을 갖고 일본에서 계속 살 수 있는 특별영주권을 받았다.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로 나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총련계와 조선계는 국적은 물론이고 영주권도 없으니 일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이들을 상대로 그 유명한 ‘조총련 교포 모국 방문’을 추진해 대성공을 거뒀다. 한국에 오려면 한국 여권을 받아야 하니 이들은 자연스럽게 민단계가 되었다. 총련계는 물론이고 조선계도 와해돼간 것이다. 여권의 힘은 그렇게 강력했다.

지금 조총련은 ‘골수 종북인 상부층만 남고 하부는 거의 다 무너졌다. 해외로 가고 싶은 골수 총련계는 일본에 귀화해 일본 여권을 받았다. 겉으로는 항일이지만 속으로는 친일의 길을 간 것이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남북 대립이 사라지자 이들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꼈는지, ‘재일교포’에서 뽑아낸 ‘자이니치’를 그들의 대명사로 삼았다.

일본에서는 삼국시대 때부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이들을 ‘도래인(渡來人)’으로 부른다. 자이니치들은 일본을 거주지로 선택했기에 현대의 도래인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과감히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도 한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조총련을 동원해 장난을 치고 돈과 전략물자를 빨아들이려 한다. 일본에는 혐한류(嫌韓流)를 퍼뜨리는 우익이 적지 않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자이니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다.

이를 제압하려면 재일한국인보다 훨씬 많은 자이니

치를 묶어야 한다. 민단 청년회와 민주평통이 재일동포 청년 모국 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전파하는 전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유 수석부의장이 그들에게는 생소한 북한 현실을 강의한 것이다. 권태오 사무처장도 “여러분을 포함한 해외 한민족의 지지와 단합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이겨내고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뿌리를 찾으면 한국 전도사가 된다

한국을 알기 위해 이들은 비무장지대(DMZ)와 서울 인사동을 탐방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전방에서는 훈련하는 포병과 기동하는 전차를 쉽게 볼 수 있다. 무기는커녕 군인도 보기 어려운 일본에서 자란 이들의 눈에는 위장 크림을 칠하고 움직이는 국군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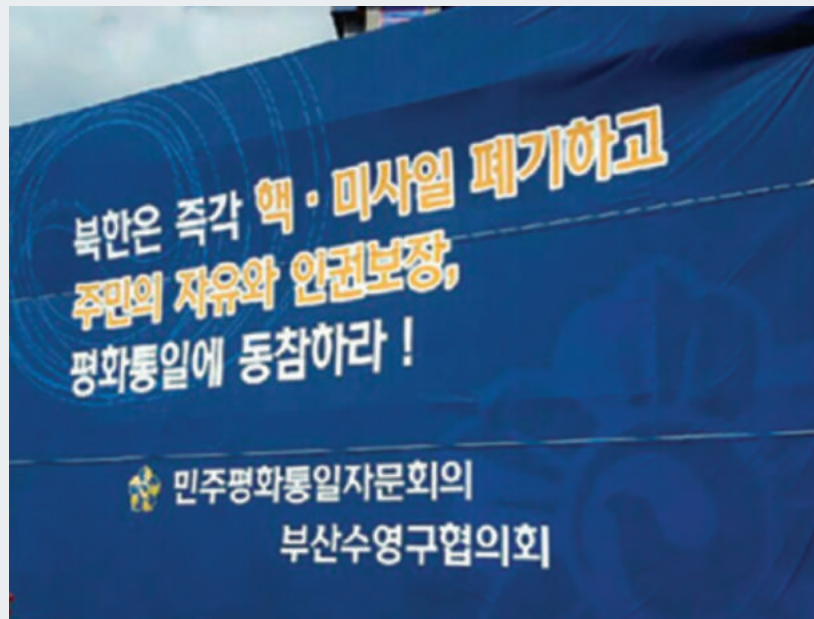
고려대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어 한국어가 가능한 유영향(미에현 출신) 양은 “1자를 마크로 한 군인(1사단이라는 뜻)들이 짝 깔려 있어 놀랐다. 하도 분위기가 엄중해 기대했던 판문점은 갈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외국인과 한국인, 현대와 과거가 어우러진 인사동에 갔으니 전쟁과 평화의 공존 공간을 본 것이다.

이들은 한국 대학생들과 반을 편성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일어가 가능한 한국 학생들을 선발했기에 대화는 일어로 했다. 그런데 한반도를 아는 한국 학생들은 일어가 짧고, 일어를 하는 자이니치들은 한반도에 대해 아는 게 별로다. 그래서인지 스마트폰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찾아보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일본에 돌아가면 한반도 뉴스를 볼 때마다 DMZ 기억이 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김정은을 없애고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다. 인사동은 물론이고 ‘강남스타일’과 K-팝을 낳은 서울 강남의 활기도 잊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평통과 함께 이 행사를 주도한 민단 중앙본부의 박유식 청년회장은 “뿌리를 찾으면 그렇게 하나가 된다. 한국 전도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NUAC**

국내외 협의회, 북한 5차 핵실험 규탄하는 다양한 활동 펼쳐 분열이 아닌 하나 된 국론이 필요한 때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둔 지난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지난 1월 6일의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으로 국내외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고 이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부산 수영구협의회가 내건 북핵 폐기를 요구하는 통천.

국내 각 지역협의회는 전국 각 지역에 ‘국론을 결집하여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평화통일에 동참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560여 개 설치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50여 회의 결의문 채택 및 규탄대회와 24건의 언론 기고 활동을 통해 지금은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된 국론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우윤식 자문위원(인천 연수구)은 9월 19일자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면 할수록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고, 경제 또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중국적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지금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단결해 북한의 변화와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주은 자문위원(울산 중구)은 경상일보 기고(9월 22일자)에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권 문제로 3만 명의 북한이 탈주민을 통해 남한의 자유, 인권, 정보에 대해 더욱 많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국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발적, 자주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도 더욱 북핵 문제 해결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영택 전북청년위원장(전북 고창군)은 전북일보 기고(9월 22일자)에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지금의 엄중한 위기는 국민의 단합과 국론 결집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는 것이 바로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국가 안보를 두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북한에 헌납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유럽지역회의(부의장 박종범)는 9월 22일 규탄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좀 더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해줄 것과 북한의 도발행위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 더 강



북핵 규탄대회를 연 전남 진도군협의회(왼쪽), 밴쿠버협의회(오른쪽), 시카고협의회(아래).

력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브라질협의회(회장 박대근)도 9월 12일 규탄 결의안을 통해 “브라질협의회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 있는 안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힘의 균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파라과이협의회(지회장 임광수)도 “동포들이 조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 하나가 되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캄보디아협의회(지회장 양성모) 역시 규탄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것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의연하고 당당히 대응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시애틀협의회(회장 이수잔)도 9월 13일 시애틀한인회 등과 함께 규탄성명을 내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국론 결집으로 응징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워싱턴협의회**(회장 황원균)도 9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규탄대회도 열렸다. 베트남 **하노이협의회**(지회장 김정인)는 9월 14일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하노이한인회 등과 함께 교민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같은 날 **밴쿠버협의회**(회장 서병길)도 밴쿠버 한인단체들과 함께 다운타운 아트 갤러리, 코퀴틀람과 버나비 한인타운 등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댈러스협의회(회장 안영호)도 9월 12일 댈러스 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자문위원과 댈러스한인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5차 핵실험 규탄 쫓기대회를 개최했다. 유석찬 부회장은 “멀리 미국 땅에서 동포들의 이민 생활이 녹록하지 않지만 이런 중대한 북한의 도발 행위에는 동포들이 한마음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우리의 뜻을 널리 알려야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외 지역회의와 협의회, 그리고 자문위원들은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해 규탄하며, 이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 평화통일을 위한 국론을 결집하고 국제사회도 이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대상 토론회

‘통일국론 결집 과제와 전망’ 주제로 열린 토론회

민주평통은 지난 9월 21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통일국론 결집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대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동국대, 국방대학원 등 5개 대학원생 36명이 참석, ‘사회·경제·인권·안보’의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발제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북한이 평화통일을 외면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 역시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며 “지금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두의 지혜와 국론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시기에 북한에 대해 연구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는 젊은 학자들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사회 분야의 ‘북한이탈 주민 바라보기 : 사회적 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제한 임수진(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씨는 “한 사회 내 서로 다른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는 현대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합의된 개

념 및 이에 따른 사회 통합의 정당성과 필요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주희(고려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씨는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거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정훈(고려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씨는 “탈북자정책은 국가 정책보다는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2주제 경제 분야에서 ‘개성공단, 재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김영지(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씨의 발제가 있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며 재개 이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표드르 채르치즈스키(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씨는 “개성공단은 개성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주제는 인권 분야로 김덕우(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씨가 ‘대북 인권정책의 역사와 쟁점 현안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향후 전개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의 쟁점은 대북 인권정책에서의 자유권과 사회권의 적절한 조화와 연계를 둘러싼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4주제인 안보 분야에서 조평세(고려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씨는 ‘안보국론 결집을 위한 국가정체성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 이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사드포대는 현재 수도권과 일부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하는 한미 패트리엇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총평을 통해 “역대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핵을 막지 못한

것을 정책의 실패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 문제 등에 있어 스스로를 제약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기 참여한 학생들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신형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2016년 민주평통 국정감사

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201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관 업무에 관한 국정감사가 9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권태오 사무처장의 민주평통 주요 업무 추진에 관한 보고에 이어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평통에서 제작한 ‘통일골든벨’ 기본학습 문제 중 제주 4.3사태에 대한 편향성에 관한 지적이 있었으며, 향후 문제 출제 시 청소년들이 현대사와 통일정책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사드 관련 자료 배포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자료

를 배포할 것이 아니라 사드 도입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검토하고 대통령께 건의드려야 하는 것이 먼저임을 지적하며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적인 통일 활동을 추진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임위원 구성에 대해 특정 지역과 연령, 성별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민주평통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고, 청년들의 입장과 현실을 공문화의 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상임위원에 청년층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면서 향후 18기 구성 시 상임위원에 청년층을 적극 배치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건의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건의를 해야 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의 정책반영도를 확인·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의에 앞서 권 사무처장은 상반기 국내외 지회의 개최, 정책건의 및 법정위원회 운영 현황, 통일 여론 수렴 다양화와 국민 소통, 통일공감대 확산 사업, 자문위원 연수 등 자문위원 통일 역량 강화 활동, 해외 평화통일포럼 등 해외 통일 지지 기반 확산사업 등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관해 보고하고 하반기에도 통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저소득가정 등 찾아 추석 맞아 전국에서 훈훈한 情 나눔 행사 열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북한이탈주민과 소외계층을 찾아 나눔을 전하는 협의회들로 대한민국이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다.

지역협의회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먼저 **대구 동구협의회**(회장 송진오)는 9월 2일 동구 율하동에 거주하는 북한이탈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남한 사회에서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 남구협의회(회장 최해상)는 남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와 함께 9월 2일 남구 목화웨딩홀에서 '2016 동포 사랑 행복 가득 북한이탈주민과 사랑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추석 명절 고향에 가지 못해 마음이 찢어질 것같이 아프지만 그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고마운 분들이 계셔서 위로가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전남 영암군협의회(회장 김성대)와 **울산 중구협의회**(회장 오병한)도 9월 6일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서울 서대문구협의회(회장 한운섭)는 9월 7일 서대문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와 함께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80여 명을 초청해 상품권과 선물세트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9월 8일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한가위 큰잔치를 열어 북한이탈주민들의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었다.

경기 평택시협의회(회장 유승익)도 9월 10일 평택국제대학교 체육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홉 번째 '화합의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팔씨름 왕 선발전,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등의 알찬 행사로 꾸며져 행사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두고 온 가족 향한 그리움·향수 달래줘

광주 북구협의회(회장 김선남)는 9월 12일 북한이탈주민 떡 나눔 행사를 열었고, 같은 날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최선희)도 김포경찰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햅쌀 전달식을 가졌다. **강원 강릉시협의회**(회장 김화목) 역시 북한이탈주민 56가구에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9월 13일 북한이탈주민 40여 명과 자문위원이 함께 모여 정성스레 송편을 빚어 북한이탈주민 30가구에 나눠주었고,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최용남)도 김천시문화원에서 북한이탈주민 40가구에 쌀을 전달했다.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정하모)는 9월 19일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과 김 세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손재필)는 9월 2일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합동 망향제를 올려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충북 증평군협의회**(회장 강춘희) 역시 9월 9일 증평여성회



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추석 합동차례'를 지냈다.

또한 **강원 춘천시협의회**(회장 이돈균)는 9월 12일 최동용 춘천시장에게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330만 원을 기탁했고, **신철범 대구 수성구협의회**장도 수성구청을 방문해 성금 250만 원을 기탁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역협의회의 따뜻한 나눔 활동에 대해 “민중평통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어울리게 해주는 것에 대해 매우 고맙다”고 말했다.

우리 주위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소식도 곳곳에서 들려왔다.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9월 8일 관내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실버랜드'를 방문해 세제 등 생필품 50만 원 상당을 전달했고,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신현기)는 9월 6일 시각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경기 파주시협의회(회장 김정선)는 9월 7일 파주시에 거주하는 108가구의 영구 귀국 사할린 동

포들과 함께 송편을 빚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경남 합천군협의회(회장 이점용)는 9월 9일 재일학도 의용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김운태(99) 어르신을 찾아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 합천군에서는 재일학도 의용군이 한 명 거주하고 있다.

생필품 전달하고 합동차례 올리며 위로·격려

강원 평창군협의회(회장 김영해) 역시 9월 12일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층 40가구에 떡을 나눠주었고,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도 같은 날 진주보훈회관에 쌀 30포대와 라면 10박스를 전달했다. **경북 구**

미시협의회(회장 김철호) 역시 향토 방위에 앞장서고 있는 제5837부대 1대대를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군 장병을 격려했다.

따뜻한 소식은 해외에서도 들려왔다. **시카고협의회**(회장 이문규)는 9월 16일 시카고 및 미국 중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 동포를 초청해 장학금과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한가위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특히 추석을 맞아 망향단 차례상을 준비해 탈북 동포들이 각자의 고향과 선조를 그리워하며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샌디에이고지회(지회장 설중혁)는 9월 15일 한미노인회를 방문해 추석을 맞아 푸짐한 점心和 과일, 떡을 대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로스앤젤레스협의회**(회장 임태량)도 LA 한인타운 피코양로병원을 찾아 노인들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서울지역회의 탈북 학생 15명에게 장학금 수여

서울지역회의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한광석)는 의료봉사단(단장 김철수)과 함께 9월 9일 민주평통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모범 탈북 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탈북 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총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고 유호열 수석부의장, 권태오 사무처장, 서울지역 협의회장과 관계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수상 학생들을 격려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어려운 상황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탈북 학생들을 보면 통일의 희망이 움트는 기분이 든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학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남 지역회의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영호남 화합·교류 통해 국론 결집에 앞장설 것”



전남지역회의(부의장 장영인)와 경남지역회의(부의장 최충경)는 9월 8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전남·경남지역협의회장 및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식을 통해 전남·경남지역회의는 영호남 화합과 교류 및 만남의 장을 통해 상호 연대의식과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고, 전남·경남지역 간의 교류협력 사업 촉진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통일운동 활성화와 국론 결집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매년 양 지역에서 회의를 번갈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자매 결연 행사에 참석한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 체결은 서로 다른 남해 바다를 하나의 벨트로 묶는 의미 있는 일로, 국론 결집의 좋은 모델로 전국에 확산된다면 국민 화합과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회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캘리그라피로 표현



인천지역회의(부의장 허회숙)는 9월 20일 인천대학교 공연장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캘리그라피(멋글씨)로 표현해 통일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통일공감 캘리그라피 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자문위원과 청년단체 회원 등 통일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한 규호(한국폴리텍2대학) 씨는 “나의 세대에는 통일이 안 되었음 좋겠다는 이기적인 마음도 들었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써가면서 지금은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협의회 초가를 저녁 통일 별빛 수놓은 아름다운 음악회

서울 동대문구협의회(회장 오광수)는 9월 3일 동대문구에 위치한 배봉산근린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평화통일 염원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했다.

동대문구 지역주민들의 평화통일 의지를 한데 모으고, 한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구민 200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동대문구 어린이합창단, 소프라노 이순화, 김금숙 명창 등은 아름다운 노래로 초가를 저녁 구민들의 마음에 통일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었다.

이날 음악회에 초청된 권태오 사무처장은 “국민이 하나 되면 난관을 헤치고 도약을 이루지만, 분열하면 큰 시련에 처한다”며 “다양한 악기와 여러 장르의 노래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 우리도 지역과 세대, 계층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어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경기 광명시협의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염원 현장 견학



경기 광명시협의회(회장 윤순갑)는 9월 3일 광명고 학생과 교사, 자문위원 등과 함께 판문점과 제3땅굴, 그리고 도라전망대를 견학하며 분단의 아픔을 체험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최강(2학년) 학생은 “통일에 대한 고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또 내가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울산 남구협의회 어깨동무하기 멘토링 한마음 가족 결연식

울산 남구협의회(회장 최해상)는 9월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쉼터에서 서동욱 남구청장, 박미라 남구의회의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멘티학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깨동무하기 멘토링 한마음 가족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결연식을 통해 맺어진 멘토·멘티는 17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최해상 협의회장은 “민주평통 멘토링 활동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상담을 하는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구 달성군협의회 통일 염원 청소년 창작춤 축제 개최



대구 달성군협의회(회장 김상문)는 9월 8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군내 중·고교생과 자문위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염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Smart-기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 통일과 관련된 주제를 자유로이 춤과 노래로 표현하며 그들의 기량을 뽐냈다.

이날 최우수상인 통일상을 받은 달성중학교의 크로우팀은 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나간 것처럼 한반도 통일도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으로 풀어나간다면 통일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그들만의 창작춤을 통해 무궁화가 만발한 한반도 지도에 ‘영원한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새겨넣고 대형 태극기를 몸에 두르는 등 그들만의 창작춤으로 통일을 표현하며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충남 서산시협의회 “통일미래에 대한 바람을 글로 담아요”



충남 서산시협의회(회장 송낙인)는 9월 9일 서산 중앙호수공원에서 400여 명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통일을 향하는 마음, 분단의 아픔, 미래 통일한반도, 청소년들의 통일미래에 대한 바람’을 주제로 청소년 평화통일 백일장을 개최했다.

전북 장수군협의회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

전북 장수군협의회(회장 신봉수)는 9월 12일 장계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



과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주제로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유현주 강사는 북한 학생들의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 문화, 북한의 자유 없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렸다.

제주 제주시협의회 멘토·멘티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제주 제주시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홍영선)는 9월 10일 북한이탈주민과 이들과 멘토·멘티 결연을 맺은 여성자문위원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관용 상임위원(한라대 교수)을 초청해 멘토링 교육을 진행했다. 고 교수는 이날 교육을 통해 멘토·멘티는 단순히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멘토·멘티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시협의회는 올 초에 여성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이 2:1로 멘토·멘티를 구성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지 적응을 돕고 서로 소통해 행복한 제주에서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경북 군위군협의회 통일시대 시민교실 개최



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와 통일한국에 대한 준비’를 주제로 강의를 한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입국으로 작은 통일한국은 벌써 실현되었다”며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감사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을 한 이순실 탈북 강사는 자신의 탈북 이야기와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분단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해 전했다.

한편 군위군 기동대 남경주 씨는 ‘민주평통’ 4행시 짓기에서 ‘민주평화통일을 통해 한반도의 한 주인이 되어 남한과 북한 모두 걱정 없고 평등하게 사는 최고의 방법은 통일입니다’로 표현해 우수 4행시로 뽑히기도 했다.

뉴질랜드협의회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 오찬 열어

뉴질랜드협의회(회장 도언테)는 코넬대학교 함께 9월 1일 오클랜드에서 오클랜드 분관 차창순 총영사와



멜리사 리 의원을 비롯해 오클랜드 지역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 등 80여 명을 초청해 한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싸운 노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세 때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한 노병은 “젊음을 바쳐 싸웠던 한국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나라”라며 이날 행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파라과이지회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파라과이지회(지회장 임광수)는 9월 10일 파라과이 한국학교 세종관 대강당에서 초·중·고교 학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골든벨 퀴즈대회를 열었다.

임광주 지회장은 “이번 통일골든벨은 파라과이지회로는 처음 여는 행사로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바른 역사관을 알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구의 '여성 통일수다방'

“북한의 고부관계 들어봅시다” “에고 우리와 똑 같구먼~”

부산의 한가운데 위치한 부산진구협의회는 여성 통일 활동의 선봉을 이끄는 리더로 맹활약하고 있다. 국내 단위 협의회 사상 처음으로 '여성 통일수다방'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 1 600명의 여성 리더들과 북한이탈주민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여성 통일수다방'.
- 2 설을 맞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백옥자 협의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 3 지난 8월 열린 3분기 합동정기회의 및 남해군협의회 초청교류 행사.



지난 3월 21일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북한의 생활상과 남북의 차이 등을 내용으로 한 통일교육 행사가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는 행사로는 자주 접해온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기 쉬웠다. 하지만 그 규모나 구체적 내용, 청중들의 구성이 사뭇 남달랐다. 600명을 헤아리는 청중 자체도 상당했지만, 대부분이 여성들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게다가 행사 내용도 '생활밀착형'이었다. 북한 여성의 결혼과 명절 이야기, 북한 직업에 대한 이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 등 일반인들 특히 여성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맞춤형 주제였다. 패널들과 청중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성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북한과의 통일을 내용으로 다뤄 남성 위주로 흘러가기 쉬웠던 토론회가 '여성 중심'으로 진행됐다.

바로 부산진구협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협의회 단위에서 마련한 '여성 통일수다방' 행사 광경이다.

“무모해 보이는 기획이었습니다. 지역 여성 리더들과 북한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추진한 행사였지만 단위 협의회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존 자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심정이었죠.”

백옥자 부산진구협의회장은 협의회 간사와 임원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오히려 전에 없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순직·전몰군경 유가족 위로행사 갖기도

부산진구는 부산의 16개 구·군 중 한가운데 위치한 부산의 실질적 중심지다. 집값이 높고 생산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 보니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지 않다는 특성을 가졌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고 통일골든벨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참여 의지나 호응이 유달리 강한 편”이라고 정현실 행정실장은 설명한다. 부산진구협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남다른 통일 욕구에 발맞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하여 그에 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부산 청년들에게 민주평통의 역할과 통일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한국 JCI 부산항도청년회의소와 함께 탈북민 가족 낙동강 환경 체험과 장학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사업도 학교장, 교무부장과 치밀한 협의를 통해 전체 학생들이 다 같이 참여해 선발자를 뽑는 등 세심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 6월에는 순직·전몰군경 유가족 위로행사도 가졌다. 부산진경찰서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평소 긴밀하게 협조해왔다.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누구보다 필요한 순직·전몰군경 유가족을 위해 작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드리고 삶의 애환을 공유한 자리는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백옥자 협의회장은 말한다.

또한 부산진구협의회는 민주평통 남해군협의회와 2010년 11월 15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매년 상호 방문하는 만남의 장을 열어 지역 간 교류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부산진구협의회가 관내 여러 단체를 살뜰히 보살피고 각종 기관과 남다른 협조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데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백옥자 협의회장의 힘이 크다.

명륜상사를 운영하는 그는 37년간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부산광역시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중앙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노인의 날 대통령 표창, 2015년 자랑스러운 부산시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민주평통에는 11기 자문으로 위촉돼 이후 부산진구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직과 사무처 직능 상임위원 중 여성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개인적으로 탈북민들 가정, 그중에서도 특히 탈북 주부들이 겪는 삶의 애환에 대해 관심도 많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백 회장의 다짐이다.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앞으로도 부산진구협의회는 이웃을 돌보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라는 더 큰 목표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풀뿌리 운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NUAC**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본 조선 마을 넓고 깊고 아늑하고 따뜻하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발굴·보호·보존하기 위해 1972년에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재를 시작으로 모두 12점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유산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편집자>

| 양영훈 여행작가 |

빛과 바람이 좋은 10월은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달이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은 계절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고, 만산홍엽의 가을산은 “어서 오라” 손짓하는 듯하다. 고향에 대한 아득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민속마을도 이맘때쯤이 여행 적기다. 지난 2010년 7월에 세계유산문화에 등재된 조선 마을인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을 둘러보자.

신라 속의 조선 마을

경주는 신라의 천년고도이다. 신라가 멸망한 지 천 년도 더 지난 오늘날에도 경주는 여전히 신라 땅이다. 어딜 가나 신라의 자취와 문화

유적이 눈에 띈다. 발끝에 나뭇구슬은 기왓장 조각도 십중팔구는 신라 유물이다. 오히려 시대적으로 신라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고려와 조선의 흔적은 흔치 않다. 그래서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은 ‘신라 속의 조선 마을’로 불릴 만하다.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촌(班村) 중 하나다. 설창산(雪蒼山, 해발 95m) 문장봉에서 말 ‘勿’(물)자 형으로 흘러내린 산자락과 네 골짜기마다 수백 년의 내력을 이어온 전통 기와집 54채와 소박하고 예스러운 초가 110여 채가 빼곡하게 들어앉았다. 이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씨족마을로도 유명하다. 500여 년 전의 조선 초기부터 여강 이씨와 월성 손씨들이 대대손손 살고 있다. 여강 이씨 집안의 조선 중기 대학자이자 동방오현 중 한 사람인 회재 이언적(1464~1529)의 고향이기도 하다.

양동마을은 모두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안계(安溪)’라는 시내를 경계 삼아 동서로 하촌(下村)과 상촌(上村), 남북으로 남촌과 북촌이 나뉜다. 대체로 높은 언덕에는 양반 가옥이 들어서 있고, 낮은 지대에는 하인들의 주택이 자리 잡았다.

양동마을의 옛집들 가운데 여강



1 양동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성주산에서 바라본 서백당 전경.
2 굽이치는 낙동강과 병풍 같은 산자락을 바라보는 곳에 들어선 병산서원.



1 하회마을 낙동강변의 만송정숲.
2 양동마을의 안쪽 구석에 자리한 초가집.
드넓은 안강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3 안동지방의 향토음식인 헛제삿밥.
4 양동마을 성주산에서 내려다본
관가정 주변의 초저녁 풍경.

이씨 중가집 별당인 무침당(제411호), 우재 손중돈이 분가해 살았던 관가정(제442호), 화재가 경상감사로 재직할 당시에 지었다는 향단(제412호)은 보물로 지정돼 있다. 그리고 양동마을 전체(제189호)와 월성 손씨의 대종가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살림집 중 하나인 서백당(제23호), 회화나무 고목이 인상적인 심수정(제81호) 등을 포함한 13곳은 국가 지정 중요민속문화재다.

양동마을은 의외로 넓고 깊다. 마을에서 안내하는 탐방 코스만 해도 6개나 된다. 하지만 굳이 코스대로 다닐 필요는 없다.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느긋하게 걸으면 된다. 조봇한 오솔길과 산길, 정겨운 돌담길과 시원한 대숲길 등 마을의 구석구석까지 실핏줄처럼 뻗은 길들이 다채로운 느낌과 풍경을 연출한다. 그 길에서 만나는 집들의 구조와 형태도 제각각이다. 그래서 양동마을을 제대로 다 돌아보려면 꼬박 하루 이틀쯤은 부지런히 다리품을 팔아야 한다.

돌담과 우물이 없는 行舟形

예로부터 안동은 ‘추로지향(鄒魯之鄉: 공자와 맹자의 고향, 즉 예절이 바르고 학문이 왕성한 고장)’, 또는 ‘양반 고을’로 일컬어져왔다. 지금도 씨족마을과 종택이 어딜 가나 흔히 눈에 띈다. 그중에서도 임진왜란 당시에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1542~1607)의 고향인 풍산면 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은 수백 년 된 전통가옥이 즐비하고 자연풍광 또한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이다.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가 600여 년에 걸쳐 살아온 씨족마을이다. 이곳에는 현재 127가구, 437개 동의 전통가옥이 남아 있다. 그중 풍산 류씨의 대종가인 양진당(보물 제306호), ‘서애종택’으로도 불리는 충효당(보물 제414호), 기와집과 초가집이 뒤섞인 하동고택, 하회마을 남촌의 중심에 자리 잡은 남촌택(중요민속문화재 제90호), 북촌을 대표하는 북촌택(중요민속문화재 제84호) 등을 비롯한 12곳은 보물이나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오래도록 조용하고 한가롭던 이 강변 마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1999년 4월 21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방문한 뒤부터였다. 오늘날에는 주말과 휴일이면 하루 1만 명 내외가 방문하는 관광지가 되었다. 전통마을 특유의 고즈넉함과 여유를 제대로 즐기려면 아예 마을 안의 민박집에서 하룻밤 묵는 게 좋다.

하회마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고샅길이다. 낱낱의 건물보다도 이 고샅길을 한가로이 누비며 맛보는 마을의 정취가 더 오래도록 기억된다. 가문의 위세와 집의 규모를 감안하면 육중한 돌담이 제격일 성싶지만 의외로 돌담은 거의 없다. 흙담이 대종을 이룬다. 이는 마을의 지세(地勢)가 ‘행주형(行舟形)’이어서 돌담을 쌓으면 무거워 가라앉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을에 우물을 파지 않고 강물을 끌어다 쓰는 것도 역시 배에 구멍(우물)을 뚫으면 가라앉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회마을의 여러 절경 중에서 으뜸은 강 건너에 70m 높이로 우뚝한 부용대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이다.

마을에서 부용대로 가려면 배를 타야 한다. 고송들로 빼곡한 만송정숲(천연기념물 제473호) 근처에 나룻터가 있다. 낙동강을 가로지른 나룻배는 류성룡이 <징비록>(국보)을 구상하고 저술했다는 옥연정사(중요민속문화재 제88호) 아래의 모래밭에 닿는다. 여기서 10여 분 거리의 부용대 전망대에 올라서면 서로 일

짜 안은 채 산태극수태극을 이루는 강과 마을이 오롯이 시야에 들어온다. 눈앞의 풍광은 ‘물길이 돈다’는 뜻의 ‘하회(河回)’라는 지명이 붙은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회마을과 이웃한 병산서원도 빼놓을 수 없다. 류성룡과 그의 아들 류진을 배향한 이곳은 서원 특유의 엄격함을 갖췄으면서도 전혀 권위적이지 않은 공간 배치를 보여준다. 특히 널찍한 만대루의 누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낙동강과 병산의 풍광은 시간을 까마득히 잊게 할 만큼 절승이다. 또한 서원 입구에는 대나무와 짚으로 둘러쳐진 야외변소(일명 머슴뒷간)가 있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사이에는 약 4km의 ‘하회~병산 선비길’이라는 문화생태탐방로가 개설돼 있다. 한적하고 아름다운 숲길이고 강변길이라 사색하며 자분자분 걷기에 제격이다. **NUAC**



관람 안내

양동마을 : (054-762-6263, www.yangdongvillage.com)-입장시간 09:00~18:00, 입장료 4000원(성인), 주차료 무료(관광객 차량은 마을 진입 금지)

하회마을 : (054-852-3588, www.hahoe.or.kr)-입장시간 09:00~18:00(여름철) 09:00~17:00(겨울철), 입장료 3000원(성인), 주차료 2000원(승용차, 관광객 차량은 마을 진입 금지)

숙식

양동마을 : 해저고택(054-763-0380), 남산택(054-762-4418), 초원식당(054-762-4436), 연화민박(054-762-4436) 등의 전통 민박집이 있다. 초원식당(연밥정식, 054-762-4436), 거림식당(된장찌개, 054-762-4201), 우향다옥(토종닭, 054-762-8096) 등의 식당도 있어서 숙식을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회마을 : 덕여재(054-857-2885), 감나무집(054-853-2957), 행산고택(054-853-2214), 회재고택(054-853-2630) 등 전통가옥 민박집이 많다. 매표소 근처에 밀집한 옥류정(054-854-8844), 하회식당(054-853-9467), 이화식당(054-842-3456), 솔밭식당(054-853-0660) 등의 향토음식점에서는 안동 별미인 안동찜닭, 헛제삿밥, 안동 간고등어구이 등을 내놓는다.

여행
정보

핵무장론을 경계함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치학

서울대 정치학 박사.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2007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등 역임. 현재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저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2> 등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에 이어 빠른 속도로 핵위협을 실재화하고 있다. 핵탄두와 운반수단이 결합된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는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면서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적 억제 수단으로 핵무장은 정당화되기까지 한다.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는 논리와, 언제까지 김정은에게 끌려다

닐 것인가 하는 감정이 합쳐지면서 대한민국이 핵국가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장론은 정당성이나 현실성에서 결코 대안이 되지 못한다. 핵무장론은 남북이 민족 공멸의 '핵분단체제'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것도 끔찍한데, 각각 핵을 끌어안고 핵전쟁을 상정하는 핵분단체제로 빠져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에서 군사적 승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아랍국들을 억제해낸다는 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핵을 갖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에는 일상의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시적인 테러 위협, 일상적인 전쟁 위험을 안고 있다. 핵을 핵으로 막는 것은 비정상적인 논리일 뿐이다. 북핵을 또 다른 핵으로 막을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협상과 압박과 변화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달성해내는 끈기가 필요하다.

핵무장은 우리의 대북 정당성의 차원에서도 본말이 전도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전적인 지지하에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고, 대북 제재를 앞장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핵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정당성 측면에서 대북 우위를 점할 수 없고, 북의 핵 보유를 사실상 공인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현실성의 측면에서도 우리의 핵무장은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세계 12위의 교역국가인 대한민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면서 핵개발을 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 시기에 대덕연구단지에서의 사소한 핵물질 추출만으로도 국제원자력기

구의 가혹한 사찰과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수입과 수출로 경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낼 리는 만무하다.

맹방인 미국의 동의를 얻기는 더욱 무망하다. 굳이 박정희 시대 핵 개발의 쓰라린 역사를 떠올릴 필요도 없다. 미·중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정전체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을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도 명약관화하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하는 동북아 핵 도미노의 서곡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핵위협 증대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대응일 수 있다. 북핵을 해결하기는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는 무기력의 반작용일 수 있다. 그럴수록 이성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최악의 북핵 위기에서도 여전히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핵무장론은 악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어설픈 악일 뿐이다. 악은 악으로 이길 게 아니라 끝까지 선으로 이겨야 한다. **NUAC**

온 가족이 도전하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통일 의지를 고취하고자
‘통일골든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 지면에서 열리는 ‘통일골든벨’을
통해 온 가족이 우리 역사와 통일에 관한
시사상식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 01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이순신을 천거하고 전쟁 기간 내 조선을 이끈 재상은 누구인가. <징비록>이라는 저서를 남겼다.
① 이항복 ② 류성룡 ③ 황희 ④ 김성일
- 02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있다 최근 탈북한 북한 외교관은?
① 태영호 ② 고영환 ③ 최주환 ④ 황장엽
- 03 한류(韓流)와 공적개발원조(ODA) 등 한국이 갖고 있는 우수한 문화 자원과 경제 자원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등 한국의 국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외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공공외교 ② 문화외교 ③ 원조외교 ④ 안보외교
- 04 동맹을 맺어 안보를 강화하다 보면, 주권을 비롯한 자율권이 침해받고, 동맹을 맺은 나라가 벌인 전쟁에 억지로 참여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동맹을 유지할 때 맞게 되는 이러한 모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안보의 딜레마 ② 국방의 딜레마
③ 통일의 딜레마 ④ 동맹의 딜레마
- 05 북한이 핵 도발을 하는 등의 유사시를 대비해 한국군이 새로 만들고 있는 작전 개념이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3K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체계인가.
①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② KNTDS(한국해군전술통제체계)
③ KMPR(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
④ Kill Chain(킬 체인)

| 지난 호 <통일퀴즈> 정답 |

1 ① 려명거리 2 ② 신포 3 ④ 홍릉 4 ③ 맥아더 5 ② 항저우(杭州)

| 지난 호 <통일퀴즈> 정답자 |

김승진(경기 양주시), 임한나(세종시 조치원읍), 김상희(충북 영동군), 박차영(전북 남원시), 최자은(전남 화순군), 안재일(서울 동대문구), 유재범(서울 관악구), 전경욱(경기 평택시), 박현아(경북 영양군), 주영태(경남 거창군)

위 문제의 답을 10월 20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열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힌트 <통일시대> 10월호(제120호)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세요.

보내실 곳 우편번호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통 <통일시대> '통일골든벨' 또는 '통일퀴즈' 담당자

이메일 jmisug@korea.kr
※ 이메일로 보내실 때에는 문화상품권을 받으실 주소를 꼭 적어주세요.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마감일 이후에 보내신 이메일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